

第297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11年3月2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국무위원(문화체육관광 정병국) 인사 1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0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국무위원(문화체육관광 정병국) 인사

(10시07분)

○의장 박희태 오늘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의 인사가 있습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입니다.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문화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향유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인 콘텐츠 및 관광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09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평택 을 출신의 민주당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 출신의 정장선 의원입니다.

우리 정병국 장관, 질문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까 취임 소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률 전 국제청장과 에리카 김이 귀국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귀국한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다 우연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한상률 씨는, 전 청장

은 수사팀하고 전혀 의견 조율 없이, 사전에 전혀 연락 없이 귀국을 했고요. 에리카 김은 최근에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 오겠다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장선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조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장선 의원 그러니까 뭐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보증하고 들어왔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장선 의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장선 의원 먼저 한상률 전 청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크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에 나오고 합시다만 잘못이 없으면 왜 미국으로 2년 동안 도피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 이귀남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 거래 없이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초점입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입니다.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배경입니다.

지금 의혹되고 있는 것이 부산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했다, 이것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는 것들입니다. 조사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부분도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수사가 끝나면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를 지금 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장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POSCO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들었습니다.

○정장선 의원 이것도 조사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부분은 고소·고발된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분명히 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장선 의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은 한상률 전 청장과 그다음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간의 대질까지 할 거냐라는 것도, 물론 수사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 다 하셔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필요하면 할 텐데 그것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정장선 의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취지를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또 하나는 한상률 당시 차장이 이 정부 실세들에게 그림로비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부인의 증언입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2007년 12월 남편에게 ‘정권 실세들에게 10억 원을 쥐야 하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혹 사항이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분야별로 말씀드리냐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금 검찰도 이 질문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시다마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해서 실추돼 있습니

다, 많이.

이번 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만약 하게 된다면 검찰은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께서는 지휘 감독권을 갖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이번 사건에 관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드린 문제입니다. 지금 KBS 사장 등 방송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장선 의원** 정권이 이번에 바뀌면서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그러니까 대통령특보가 임명됨으로써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MBC 다 그렇게 겪었습니다.

이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권 교체기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 문제는 좀더 개선된 방법으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 초기에 KBS, YTN, 기타 방송국들에 대한 인사 문제는 정권의 실세, 뭐 특보 이런 사람들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보다는 그 방면에 전문식견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자리에 보임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정장선 의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장 선임 방식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답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의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정장선 의원** 또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해임되고 또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동의합니다.

○**정장선 의원** KBS 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장선 의원** 방문진 이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고 MBC 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장선 의원**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연임이 되십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통보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웃음)

통고받은 바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임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또 그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장선 의원**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장선 의원** 이미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설왕설래는 했습니다.

○**정장선 의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시중 위원장께서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방통위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하부기관이 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합의제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이미 독임제가 됐고 또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3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방송사에는 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이 해임되고 또 파업이 일어나고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이걸 김우룡 이사장 얘기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쯤포인트 맞았다라는 것도 우리 위원장 재직 시에 다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의 여러 가지, 일부에서는 테러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큰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 하부

기관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장 재임 시절에 방송 탄압이 주도됐다, 많은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69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방송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자들이 해직되고 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종편 선정할 때도 4개의 종편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가 됐을 때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M&A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너지는 데가 분명히 생긴다, 설마 했는데 4개를 다 했습니다. 결국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현행 2500원에서 5000원, 6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거의 2배, 3배를 올려야 된다고 앞장을 서시는 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KBS 독립성 문제가 아주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물가 때문에 이 난리인데 수신료를 5000원 6000원, 2배 3배 올려야 된다고 하시고 다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미 이 정권에서 충성스런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사태, 그다음에 종편 선정 과정 이런 거 하면서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하고 얼마나 상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송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합니다마는 권력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하부기관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독임제적 모양을 보였다는 말씀 하시는 데 우리 위원회는 인사 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사

람, 국회에서 선임하는 세 사람, 이렇게 여야가 공존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독임제적, 독단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회의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표결을 할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전체 회의의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부득이하게 견해가 통일 안 될 때에는 표결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정 없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는 언론자유지수가 2009년에 64위로 전락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작년에는 42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 조사기관의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는 어떤 점에 주안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보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10여 년간 계속해서 지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편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개, 많다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경쟁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절대평가로 방침을 정할 때 우리의 모든 여건을 다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했고 공정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아마 1990년대부터 KBS 수신료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의 정상화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런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된 월 2500원의 수신료가 5000~6000원 정도 선에서 하면 KBS가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청정방송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우리의 선진문화를 창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해서 시청률 경쟁 하지 않는, 상업방송과 경쟁하지 않는, 그리고 청정방송으로서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도매체의 탄생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수

준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와 있음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또 하나 확인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우리 위원장만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권력 기관화되었는지 위원장만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수신료 5000~6000원 올린 거 누가 동의합니까, 지금?

하여간 저는 분명히 연임해서는 안 된다 이것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정장선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판례를 봐도 담배가 폐암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담배는 일종의, 뭐랄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흡연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서 또 경제적인 부담도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장관께서 별로 담배의 폐해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 제가……

○정장선 의원 좀더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부러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하여튼 흡연으로

인한 심각성은 익히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지금 흡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폐암, 여러 가지 기관지 관련한 문제,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고요. 또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에도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흡연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협약기구인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정장선 의원 이 협약에는, 담배는 한 600여종의 첨가물을 사용하는데 중독을 유발하고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더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를 공개하고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정장선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 법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정장선 의원 왜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2005년에 기준을 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에 첨가물을 넣는 것을 규제해야 하고 첨가물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2005년에서부터 한 6년 동안 이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정부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담배사업법상에 주요 성분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경고문구의 일환으로 발암성 물질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로 하여금 첨가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 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배의 안전관리라든지 금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차원에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건

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이 한 16건 정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 그 법안들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미국은 FDA에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렇습니다.

○정장선 의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식약청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나 흡연 문제는 국민건강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사회적인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국의 경우 포함해서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이것은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보건 규제를 책임 맡은 당국이 이러한 담배의 안전성 규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담배에 대해서 좀 안이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해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나 보건복지부가 금연이나 흡연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 표현이 좀 부족한 탓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의 심각성만큼은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선 의원 국회에서도 아마 의원님들이 연초 재배농가라든가 소매상들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국회 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우면 저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 저는 의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말씀, 또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 됐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정장선 의원 요새 계속 자살 생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급자입니다. 지난번에 합의할 때 무급, 그러니까 회사가 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4대 보험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데 취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460명 되는데, 취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생계가 막막해서 스트레스 등으로 죽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최근에 쌍용자동차의 이른바 무급 근로자들의 잇따른 비보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회사 경영사정이 좋아지면 채용을 우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용자동차가 여러 가지 노사 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경영사정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들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사 양측, 그리고 기업 업체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앞으로 460명 이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번에 죽은 임모 근로자는 부인이 작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지금 본인도 죽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면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 도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도박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총리께서 그 심

각성을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심각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의원** 어느 정도 심각한지, 총리께서……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사행산업 이용객의 약 61%로서 해외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선 의원**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세계 다른 선진국의 한 세 배, 네 배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도박 공화국이 됐는지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사유 또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여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그런 점과 또 한편으로는 한탕주의 영향 아닌가 싶고, 또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도박에 관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행산업이 정부의 준예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각 부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구 확대합니다. 단속도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행산업은 공식적으로 우리 사행산업이 한 16조 되는데 그 두 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병률이,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세 배, 네 배 되는데 그 치유하고 예방하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진국의 한 8분의 1도 안 됩니다. 선진국은 순매출액의 1.5%를 치유와 예방 기능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2% 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장선 의원** 그런데 이것을 늘려라 늘려라 하면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어질까 봐.

국민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행사업자가 예방 및 치유를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출액의 0.2%에 그치고 있어서 정말 미미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처에서 일정한 뜻을 가지고 다소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 중독 치유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관련 사감위원회가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저희가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고맙습니다.

총리, 저한테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장선 의원**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장선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KBS 등 방송 공영 문제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법을 제출해라…… 문제가 있다고 아까 방통위원장이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장선 의원** KBS 사장도 말씀하셨고, MBC 사장 다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법안을 내라 그랬더니 국회 보고 내 달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정부가 법을 내야지요.

이 부분은 총리께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또 바뀌어서 사장이 또 해임되고 이게 옳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방송의 독립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가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선 의원** 총리실에서 이것은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방송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면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장선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인 것은 압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입법도 가능하고……

○정장선 의원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또 의원 입법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총리께서는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아까 방송통신위원장님 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정장선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KBS 사장을 해임하고 또 임명하고, MBC YTN 이런 식으로 특보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KBS 사장, MBC 사장 다 인정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개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40%가 넘느냐 하는 겁니다. 시중에 만나면 그런 겁니다, 화제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보수언론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진보언론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보수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정권이.

보수언론에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탄핵감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능 보수정권이라는 겁니다.

물가 불안, 전세 대란, 일자리 실종, 영터리 인사, 안보 무능에 구제역 파동, 민생 무능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물가난과 전세난은 정권 탄핵 사유다, 이거 칼럼입니다, 보수언론의.

또 하나 불통 리더십이다, 이것도 보수언론에서 쓴 겁니다.

취임 3년 동안 신년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달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통법부가 됐고요.

천안함 사태가 터지든 연평도 피격 사건이 터졌어도 야당 대표한테 전화 한 번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만나고 통화하면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안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당 대표에게 ‘많이 컸다’는 식으로 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시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1인 통치 방식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우왕좌왕합니다. 미국보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많다고 하자 일주일 만에 행안부가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기름값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뒤지고 다닙니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 김황식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에서 그러한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위기 회복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 시점에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분발해서 더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정부로서도 겸손한 자세로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더 잘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나가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소통의 노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지금 헌법 개정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헌법에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역대 총리들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로서 지금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그런 의견들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부가 국민이 걱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어떤 총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총리를 할 때 그래도 물러날 때 열심히 했고 소신껏 했고 괜찮았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또 밖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그야말로 충분히 소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이런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 정운찬 총리 때 직원조차 마음대로 임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청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운찬 총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치 아픈 것만 하다 떠난다, 잘못하면…… 4대강 사업, 세종시 하다 떠났습니다. 그분, 명예가 높았던 분인데 결국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몽골에 많이 다닙니다. 몽골 국회의원들,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의장, 외교부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번에 음악회에 총리하고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장선 의원 늦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안하

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총리가 있느냐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 다 압니다, 이름까지. 한국에 총리 제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위상이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장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일부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오랜 관행을 살펴보면 표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출석을 합니다마는 표결이 없는 본회의에는 좀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결이 없는 본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50인 가까운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의사정족수가 60명인 것을 참작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출석이 안 돼 있습니다. 오후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니까 의원님들, 많이 좀,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먼저 김황식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며 역사이고 자존심입니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우리의 얼굴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하여 당시 언론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였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선사시대 바위그림 유적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한 국보 아닙니까. 반구대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유적이고 세계 최초로 고래사냥 암각화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구대 암각화에 주목하는 것은 선사시대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매우 사실적인 포경 장면이 새겨진 지구상 유일한 암각화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선 역사적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준공된 사연댐에 의해 발견 당시부터 이미 수몰된 상태였고 지금까지 연중 8개월 이상 수몰되기를 수십 년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원형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사연댐으로 인해서 1년 중의 상당기간 동안에 수몰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길부 의원 반구대 암반의 특성이 화강암이 아니라 퇴적암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보존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수몰과 노출이 반복되면 훼손의 가속화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지 40주년, 사연댐에 수몰된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1971년 처음 발견한 이후 24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국보 지정 이후 또다시 16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발견된 지 24년 만에 국보로 지정했으면 그때 보존대책도 함께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강길부 의원 국보를 수장시켜 놓고 수수방관, 방치하는 것은 문화강국을 앞세우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보존대책을 하루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2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승수 당시 총리에게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존대책을 요청한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한승수 전 총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현지를 방문하여 보존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보존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가 장기화된 것이 정부의 정책조정 의지와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 관리제도의 심각한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작년 6월에 총리실에서 그동안의 보존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연댐 수위조절 대책을 일단 마련을 하고 그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아직 뚜렷한 성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게 조정대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총리실이 나서서 조율한 정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사연댐 수위 조절하는 과정에서 물을 이렇게 빼내면 또 울산의 식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연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책이 안 나와서, 수위를 낮추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문댐하고 관련된 대구·경북 지역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지금 함께 협의를 해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더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지자체하고 그런 문제들을 망라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그러면 항상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답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울산에서는 운문댐에서 물을 또 끌어 써야 되고, 또 운문댐을 사용하는 대구지역 식수 문제를 위해서는 취수원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에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의 취수원을 옮기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만 나오면 더 조정 결과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총리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조속히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국보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역사이고 자존심입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불타더라도 복구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차례의 붕괴로 영원히 재생될 수 없는 반구대 암각화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거의 유사한 해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4년 4월 포르투갈 정부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중 구석기 시대 암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국가 전력의 2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정부는 1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댐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코아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던 것입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전력공사에 보상해 주었으며 유적

일대를 선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국립박물관을 현지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왜 포르투갈이 경제적 위상보다 훨씬 더 큰 문화적 대국으로 대접받고 있는지 이들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포르투갈의 사례를 설명하셨습니다.

포르투갈 국민들의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의 의식과 높은 열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와 같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이제 반구대 암각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이미 G20 의장국을 맡은 바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 문화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포함하여 대곡천 암각화군을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려놓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를 물 속에 수장시켜 놓고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저도 3월 중에 우선 현지부터 제 눈으로 더 확인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부 의원 인위적인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유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강길부 의원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것은 우리들 국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보존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 보시고 조정된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총리실이 담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광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 방금 전 총리에게 말씀드린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3선 의원으로 출근 국회의 문화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문방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누구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지정도 댐 건설도 국가가 한 일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훼손에 대해서 문광부로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한 바가 아직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정부 방침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국보가 수장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오늘의 사태는 명백히 인재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강길부 의원** 민족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반구대 암각화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4926억 원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인류사에서 최초의 포경유적

으로 울산만과 동해안이 포경문화의 발생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처럼 뛰어난 선사시대 해양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관리할 것인가에 급급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반구대 암각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또는 인문학적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 보존·관리 대책이 확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학술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해 나가고 연구하고 또 교육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지금쯤 이러한 인문학적인 연구는 많은 자료가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도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맞습니다.

○**강길부 의원**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강길부 의원** 바로 착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현재 반구대 암각화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는 국보를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학술교류나 조사연구·교육 및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구히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교육적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관광을 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직접 접근이 안 된 다라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주변의…… 지금 현재 울산암각화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시설을 더 보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서 실제 그것을 박물관 안에서 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지금 세계 각국은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나갈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의 경우는 이미 약 200m에 달하는 전 구간을 그대로 복원해서 라스코Ⅱ라는 복제 동굴을 조성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사용하여 연간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수입……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에 이르는 유적지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대로 재현하고 인근에 국립선사미술연구소나 국립암각화박물관 건립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암각화박물관이 기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완벽하게 이게 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덜 난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암각화박물관을 보다 더 보강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반구대 암각화가 보존도 제대로 되면서 국민 모든 분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구대암각화전시관은 울산시가 건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재에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라스코 동굴과 같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것도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

니다.

○강길부 의원 반구대 암각화는 경주 전체의 문화재와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와 곁에 있는, 천전리 각석이 소재하고 있는 대곡천 일대는 신라 화랑이 심신을 수련하던 풍류 벨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곡천 암각화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신라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1974년 산업기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오늘날 300여 개 입주업체와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시환경과 교육여건으로 말미암아 입주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사회는 청년실업과 외지인의 잦은 유·출입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공단 주변의 도시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강길부 의원 이것은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에 청년실업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으로 함께 해결해 보려는 의지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학기술의 정책을 조합해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산업기술대학 등 해결 방안을 찾아서 계속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장관의 생각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해 주신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산학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말씀하신 취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기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전문대학에 대한 중점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기술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하신 산업단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대학의 경우에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를 먼저 하고 2013년까지 15개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들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굉장히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등 9개 대학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걸 더욱더 늘려서 특히 거점 국립대학이나 주요 사립대학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자들의 그런 계속교육을 위해서 각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학과도 좀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온산공단 현지를 교육과학부에서 한번 시찰하셔서 가지고 실정에 맞는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다음은 국가 R&D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등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 부품·소재 수준을 뛰어 넘으려면 많은 R&D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업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적기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2차전지의 경우 단기간 내에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정부 예산조차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차전지 및 핵심소재에 대한 장관의 R&D 투자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R&D 투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교과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에 투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원천 연구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50%까지 확대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기초·원천 연구가 전체 R&D의 35.2%였습니다만 현재 2011년에 46.7%이고, 2012년에 5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강조하신 2차전지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기초소재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만, 특히 2차전지 부분은 모바일이나 IT의 소형 2차전지 중심으로 지금 돼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동차나 또 에너지나 이런 중대형의 2차전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전지 이 부분에 대한 R&D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반도체 중심으로 2차전지를 연구하고 있지요? 많은 성과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울산과기대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소제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특성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앞지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강길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신낙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신낙균 의원입니다.

올해 1월 유엔은 산하에 있는 모든 여성기구를 통합해서 '유엔여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구의 첫 수장이 된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여성이라며 여성의 강점, 여성의 경제력, 여성의 지혜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유엔여성의 과제는 한국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 UNDP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발전지수는 155개국 중 25위로 매우 높습니다. 학습 능력이나 대학 진학률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2009년에는 여성이 더 높은 진학률을 보였고, 의무고시에서는 여성 합격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134개국 중에 104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1.9%, 기업의 여성 임원은 1.3%에 불과해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은 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겨우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발전지수가 높은데도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아직도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성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발전을 목표로 했던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계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의원** 자녀들을 키우면서 딸이라고 차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애뜻한 애정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신낙균 의원** 그러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신낙균 의원** 요즘 부모들은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바로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신낙균 의원** 그렇다면 현재 국가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인력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5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55%를 목표로 하는 2차 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는 1차 5개년계획 때와 같습니다.

총리는 1차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의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50.3%였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9년에는 49%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렇다면 1차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정부는 1차 계획 실패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기간 동안에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육아와 가사 부담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의원** 예, 그 어려움이죠. 바로 그게 저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성차별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취업자 중 66%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하고 또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신낙균 의원 그럼에도 정부는 2차 계획에서 이런 성차별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총리, 유연근무제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남녀 공통입니다.

○신낙균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는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남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아보니까 남성 공무원이 3800명입니다.

○신낙균 의원 예? 3800명으로 보신다고요? 여하튼……

○국무총리 김황식 예, 3800명……

○신낙균 의원 전체 신청자 49명 중에서 남성이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 숫자라고 불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통합해서 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연근무이용자는 총 5972명이고 이 중에서 남성 공무원이 3800명으로 그렇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낙균 의원 뭐 통계인데, 제가 가진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성들만의 일·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시간제로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일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성불평등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2차 계획이 성공하려면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즉, 모성 보호와 보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평가된 여성 임금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여성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그 해고 대상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될 때 성평등한 일·가정 양

립이 가능하고 비로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근로 관행 개선과 경직적인 근로 형태를 바꿔 가지고 여성들이 보육 그리고 일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라든지 또 그밖에 여성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가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의원 다음은 성인지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는 2010년부터 정부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의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신낙균 의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사업이 예산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되면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선진화된 제도로서 개도국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2010년에 최초로 활용이 됐고 또 2011년도에 두 번째로 작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두 번째 할 때는 2010년에 비해서 작성 기관이나 대상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 양성평등에 성인지제도 예산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낙균 의원 제가 심의해 본 결과는 그 취지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잘못돼도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평등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으로부터 인권 개선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유엔의 라튀라는 특별보고관이 방문해서 한국의 상황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고서 초안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라튀 보고관의,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혹시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낙균 의원 총리께서 좀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인권위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신낙균 의원 더구나 성차별 사건이 인권위 전체 진정 건수의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여성인권팀 조사관 전원을 비전문가로 교체했고, 그나마 1명은 인권전문가인데 그마저 노동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가 성차별 문제에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권위의 이런 ‘묻지마 해고’는 스스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인권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내부의 인력 배치 문제에 관해서 총리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체된 사람들이 인권관계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소양을 가진 사람들로 알고 있고, 또 해고됐다고 그러는데 계약공무원의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서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해고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해고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신낙균 의원 예,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이 퇴보한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여성을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큰 자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수년 전부터 ‘성평등은 스마트 경제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기구와 기업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참여가 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를 수없이 발표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GDP를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신흥 강대국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아닌 바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계획에서 성평등 실현을 공통과제로 삼았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에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임원 할당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신낙균 의원 기업이 스스로 유리천장을 깨지 않으면 국가가 법과 제도로 그 천장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에 우리 정부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낙균 의원 더군다나 올해 초에 출범한 유엔의 최고여성기구에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이라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신낙균 의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평등 지수가 세

계 최하위인 우리나라가 자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나라의 성 평등 실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총리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성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성평등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제도라든지 성별영향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발전될 것이라는……

○**신낙균 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발전기본법은 큰 역할을 했고 여성발전지수는 세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와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을 보호와 발전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총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준비해서 발의한 성평등기본법과 정부가 제출한 여성정책기본법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둘 다 여성발전기본법을 합리적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취지에서는 공통이 되지만 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여성정책기본법은 성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또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신낙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정책기본법은 도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보다 더 후퇴한 법입니다. 성평등은 남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책 대상을 여성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성평등 촉진이

있지만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평등기본법은 명칭에서부터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법안에서 성차별 금지, 촉진,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추진 체계가 있어야 남녀 고용 평등, 성인지 예산 제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견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현실에 역행하는 법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가 제출한 안도 결국은 여성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성평등 실현과 관련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의원** 그래서 정부가 성평등기본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기본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교육 수준에서 4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차별 등 삶의 질 부문에서 29위에 그쳐 종합 순위가 1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성평등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문제로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 성평등기본법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신낙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 예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항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경 예천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의 발전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미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표만을 의식하고 구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턱턱지 못한 국가재정을 생각할 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이 시기인 만큼 민주당이 외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알이 파헤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통상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OECD 국가들과 그저 단순 비교를 해 보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한 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요소를 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가 성숙했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한 60~70%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지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격차가 더 좁혀져서 한 70~80% 수준으로 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두 가지를 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복지 지출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랐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우리와 지금 같은 GDP 수준이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그 격차는

또 훨씬 줄어든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용재원이라는 요소를 다시 더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분단국가이고 국방비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적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부지런히 지금 쫓아가고 있고 격차는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의원**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한성 의원** 복지 예산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가 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적 빈곤율, 아동빈곤율, 노동연령 가구 빈곤율 이런 것이 좀 빈곤한 상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또 최근 몇 년 전에 우리가 갑작스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가정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 이유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좀 양극화도 심화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런 게 좀 걱정스럽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사실은 그 지니계수나 이런 양극화를 나타내 주는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체감이 좀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도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런…… 뭐 인정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복지에 대한 인식도 전문가나 학자들 생각을 빌리면 우리나라 복지 인식이 아직도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마 이제 본격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 복지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재정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선진국도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가 이제 단순히 돈 주고 생활, 소득 보전을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급여자의, 피급여자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을 느끼고 또 국민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또 납세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야 급여를 받는 사람의 행복도 높아지고 국민경제도 튼튼해지지 않는가, 이런 개념의 복지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게 아마 맞춤형 복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 같은 범주로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렇게 지금 엄청난 복지 예산 부담을 좀 해소하는 통로가,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 재정도 절감을 하면서 정책 대상자들의 체감도도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확실적인 복지를 할 때보다 맞춤형 복지를 할 때가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복지서비스 제공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서비스의, 사회서비스 말씀……

○이한성 의원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복지급여 체계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복지급여 채널이 좀 중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가지 채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자가 가장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층이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조금 급여를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기초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보호하려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복지급여 채널이 9개 부처에 스물여덟 가지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이한성 의원 더 복잡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더 복잡한데도 지금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예.

○이한성 의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이한성 의원 사실은 부모를…… 밑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급여대상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행정 어떤 재량을 인정하고 그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좀 인정해 준다면 경직된 그런 복지급여 결정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경직성을?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 정부 들어서 중복이라든지 부정수급자들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구축을 해서 중복이라든지 부정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특히 사회 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서류를 통한 자격을 심사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복지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대상자들의 어떤 질적인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지금 올해 이제 고도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게 되면 이제 부정 수급이 방지되면서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완화하면서 사각지대를 좀 메워 나가는……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행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번에 적발된 예산 규모가 한

3300억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한 3280억 정도의 부정……

○**이한성 의원** 예, 엄청난 예산이 사실은 좀 부당 수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부정 수급……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또 사각지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제를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마 사통망이 이제 고도화되면 부정 수급은 철저히 차단이 되고 사각지대를 더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좀 신속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지금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정말 참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중대한 기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웬만큼 다 찾아서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보편적 복지’ 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료……

○**이한성 의원** 의료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썽요,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제도적인 틀은 상당히,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사통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의 경우 우리 보육비용은 정말 지난 정부에 비해서 3배 정도 늘려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을 갖추었고요. 장애인 영역만 해도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제 대상이 올해 10월부터 5만 명까지 확대돼서 시행이 되는 이런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갖추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

근에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을 하면서 3+1,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플러스 반값 등록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충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나 제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이 무상 복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예,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벌써 유럽에서는 오래 전에 실시를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 1940년대 영국 스웨덴 또 아르헨티나 이리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영국이 정말 참 오래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를 보장한다’ 이런 이념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 당시에 전후에 세계적인 전후 복구사업으로 경기가 활황을 이루고 젊은 층이 넘쳐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정규직 근로자로 복지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일 때는 가능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 뒤 지금 한 70년 흘렀지요? 70년 흐른 사이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최근에 이런저런 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7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 문제가 대처 수상, 또 토니 블레어 수상, 현재의 캐머런 수상에 이르기까지 많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최근에 캐머런 수상이 조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육아수당을 전 국민에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16세까지, 학생은 19세까지 무조건 첫 자녀는 20.3파운드, 둘째는 13.4파운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후년부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연봉 4만 4000파운드를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영국은 물론 또 무상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948년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상의료로 인해서 전 국민이 득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을 보장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무상의료 때문에 한 6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고 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 질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사실은 영국하고 우리는 의료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다릅니다. 영국은 거의 국가가 상당 부분 의료 시설을 뭐라 그럴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한성 의원 국립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리고 의료인들이 거의 준공무원화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사르코지도 이번에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개혁을 좀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것이 정년 연장, 또 연금 급여 시기 후퇴, 이 두 가지 조치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연금 의무납부 기간을 60세에서 62세까지 납부해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가로부터 연금받는 기간은 65세부터가 아니고 67세부터 준다, 두 가지 후퇴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예를 제가 보면서 복지 제도를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고, 일단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한다는……

○이한성 의원 후퇴하기가 참 매우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 점에서 스웨덴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도 1940년대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시했는데 그 뒤에 여러 번 개혁을 해 왔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권은 오랫동안, 거의 만년 여당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사회당 정권에서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그리 되면 국고가 탕진된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사회민주당의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좀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런데 의원님, 스웨덴의 복지 제도만 해도 보편적 복지 제도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전제하고 사실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데, 세금 납부에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소득세에 따라서 연금액을 정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노르웨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복지로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하여튼 북유럽 국가들은 좀 비슷한……

○이한성 의원 노르웨이가 석유 수출 물량이 세계 3등입니다. 세계에 석유를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쌓인 국고가 5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돈을 장차 영구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역시 여기도 보편적 복지에서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이렇게 전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너무 쓰면 후손들이 위험해진다, 이런 것을 다 경계하면서 복지 혜택을 스스로 줄이거나 개선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에 비하면 아르헨티나는 좀 다

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살아야 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아르헨티나는 반면교사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참고할 만한…… 그렇지요.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에 세계 4위 부국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지금은 GNP가 세계 62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러면서 부채가 많아 가지고 2001년도에 외국 부채는 못 갚겠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에게는 계속 지금 복지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또 다시 일본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만년 여당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민주당이 화려한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요? 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바로 2년 전 상황이었지요.

○**이한성 의원** 2년 전 상황인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생활 공약이라고 해서……

○**이한성 의원** 지금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니까 아는 대로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한성 의원** 모든 어린이에게 매월 2만 6000 엔을 준다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리고 출산격려금을 55만 엔으로 올린다 또 공립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이고 사립 고교에는 연간 12만 엔씩 준다, 월 7만 엔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구직자 생활비 지원, 최저 임금 인상 또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철폐, 굉장히 화려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썽, 그 공약 덕분으로 집권은 했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때 필요한 예산이…… 국민이 예산 걱정을 했겠지요, 자민당도 공격을 했을 테고. 그때 16조 8000억 엔 하면 된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것 다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한 3조에 그치고 그 다음해에는 6000억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수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실패에 봉착했는데 그래서 자기모순에 빠지게도 작년 7월에 소비세 인상론 거론하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이렇게 복지를 한번 내세워 가지고 후퇴하기는 엄청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전통적 복지 모델은, 앞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앞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우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또 경제 성장률 둔화 내지 세계 경기의 장기적 침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고용 여건이 열악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때문에 전통적 복지 모델은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시기에 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전환기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이한성 의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장담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저는 방향성이나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성장이 곧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양상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되지만 그 성장의 성과가 아주 소외계층에까지 골고루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성장과 관계없이 또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은 정부가 계속해 나가고 그를 위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한 복지의 예산이나 재정은 늘려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경제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 정책이고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 성장 후 복지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빈곤층 구제 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통해서 사회 통합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또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 관계를,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복지도 국가의 재정 능력이나 사회의 지불 능력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그것을 너무 뛰어넘는,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게 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장관님, 잠깐 쉬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한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

관님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상급식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무상급식을 하자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한성 의원** ‘적은 예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질급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차라리 그러면 있는 예산 가지고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내서 그 기금에 보탠다면 학생들이 좀더 질 나은 깨끗한 음식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교육, 그 무상…… 급식에 있어서 무상급식 확대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급식의 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급식의 질 문제겠지요.

지금 학교에 비가 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급식으로 돌린 데가 있습니까, 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지방교부금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한성 의원**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무상급식비를 국가에서 대준다면 소득재분배 내지 양극화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상급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이한성 의원** 부자들한테는 좀 부담을 시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자존심 안 상하게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한성 의원** 무조건 국가에서 눈감고 다 나눠 주기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아직도 결식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아직도 아침 굶고 저녁 굶는 학생이 있어요. 또 지역아동센터 돈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심합니다. 그런 데는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지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저소득층 교육예산이 아직까지 충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과후학교의 수강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의 아이들 돌봄 기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아동들의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열악한 교육시설도 아직 문제가 되고, 해결할 게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급식비를 이렇게 눈감고 다 대주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특히 저소득층 교육에 아직까지 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한성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장관 나와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잠깐 중간에 끊겨서 미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닙니다.

○**이한성 의원** 무상의료는 어떤 것입니까? 일정한 금액, 병원비가 높아지면 그 뒤부터는 전면 무료로 1년간 돌봐준다 이런 겁니까? 스웨덴은 그렇게 돼 있던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썬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무상의료는 사실은 무상의료라기보다 내용을 보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면 진료비를 일부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개인 부담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자부담을 한 10% 정도는 하게 하는 거니까 완전한 무상의료는 아니고요. 외래의 경우에도 한 60%까지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거니까 여전히 자기 부담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한성 의원** 완전 무상의료는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인기 작전을 쓰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니…… 그래서 ‘실질적 무상의료’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의원** ‘전면 무상, 유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폐단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경험적인, 임상적으로도 확인이 된 것이 의료가 무상이 되면 아무래도 의료이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이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이런데 예산 부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한 16조 8000억인가 하면 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료에 한정해서만 8조 1000억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게 충분히 계상된 겁니까, 축소 내지 계상 못 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썬요,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을 한 탓일 수가 있겠는데 저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소위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가격탄력성을 전문가들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어떤 임상적인 통계치를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보다 한 2배가량 의료이용량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탄력성이 1에서 1.5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계한 8조 1000억 보다는 훨씬 더 많은 30조에서 한 39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부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게 아마 더 맞는 계산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서

사실은 병원에 못 가는데 국가에서 전면 대준다면 병원에도 갈 테고 충분히 날 때까지 병원에 있게 되고, 유럽에도 보니까 장기입원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영국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이 병원 입원을 대기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전문가들 연구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을 높게는 한 3까지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한 1.0 내지 1.5 정도의 가격탄력성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과거에 암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했을 경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고요, 기초생보자들은 자부담 없이 의료급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급여 이용자들의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 이용하는 것보다 무려 3배 내지 5배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다 감안하면 가격탄력성이 1.0에서 한 1.5까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30조에서 39조까지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모델은 좀 우리에게 안 맞다,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제도다, 또 한번 채택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한성 의원** 예산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땅에서 기름이 솟는 노르웨이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러니까 의원님,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이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한성 의원**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누군가가 지불을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무상복지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복지 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소득보장형에서 생활보장형으로, 좀 자아를 실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연속적·예방적 복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역량을 좀 강화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또 나중에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을 내도록 이런 제도로 가야 재정도 확보되고 사회적 역량도 강화되고, 유지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그 복지의 방향이 사실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 방향입니다.

○**이한성 의원** 맞지요? 그런 방향 맞지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사회보장 기본법도 좀 개정돼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옷을 맞추려면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 주장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데 국가로서는 지금 돈 쓸 데가 많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초기에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 과정에서 급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민간인에 대해서 공산군하고 연계된 걸로 의심하고 재판 없이 그냥 학살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이한성 의원** 이런 데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이런 예산도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대통령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3월 말에 입지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전국적으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국론이 지금 사분오열됐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여하튼 지금 국론이 계속 이렇게 분열되면 곤란하니까 통합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보다 더욱 유연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로 지금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택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고창·부안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전국 초등학교의 80%인 4703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기록적인 날입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결정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였고 한나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하여 또다시 한나라당은 ‘저질 코미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한나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복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부조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는 대법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헌법 10조와 34조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김춘진 의원** 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헌법정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의 성과는?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행복 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는 복지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여건, 재정여건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보다 실질적인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참고 자제를 해서 그 몫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돌리는 복지정책, 그것이 핵심적인 복지……

○**김춘진 의원**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의 권리적인 입장에서 제정한 걸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김춘진 의원** 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합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이게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참여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김춘진 의원** 또 기초노령연금제도 만들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이명박 정부의 성과는 뭘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10년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능동적 복지로 설정을 하고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근로 유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한 복지정책 그리고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또 각종 취약계층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지난 10여 년의 전 정부의 바탕 위에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건강보험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 400여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만 해도 150만 명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의 필요성을 누가 판단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복지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혜택과 건강보험 혜택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체납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명히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역시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초연금제도 도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정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을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기초노령연금 80%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도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거를 존중을 해서……

○**김춘진 의원** 총리께서는 복지에 대해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을 혼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작정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일자리, 일할 수 있는 분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속기록에 보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때에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취지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재정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혜택은 넓힐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선 국방비 부담만 외국 같은 수준이 돼도 복지 혜택은 더 그만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복지혜택을 늘려서 그것이 재정에 부담이 돼서 우리 후세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생기는 부담뿐만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될 건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길게 보고 복지정책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국방비 지출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 약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몇 년도 통계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몇 년도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에서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통계가 다르겠지만 비교한 걸 보면 2.8%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6.5%입니다. 미국은 5%고 또 싱가포르 4.8%고, 이런 국가들도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서 사회복지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유럽의 제국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들은 국방비가 우리의 절반 수준 비율이 될 겁니다.

○**김춘진 의원** 우리는 대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또 총리께서는 “경제성장이 쇠퇴하거나 후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경제성장에 저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복지정책의 합리적인 시행에 따라서 경제성장

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가 또 특히 의료나 교육복지·보육 쪽에 행해지는 그 자본 투입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도할 때는 R&D 투자라든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양자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 접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복지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복지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그쪽이 과도해지는 경우에는 R&D 투자라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부담을 아무래도 줄여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경제 발전에……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그러면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경제 여건,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보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 국방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성숙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면, 그리고 우리의 고령화 사회에의 진입 정도,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하고 단순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바람직한 수준에는 와 있다, 앞으로도 계속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면 양호하다는 뜻인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형편상 지금으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정도의 수준에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 질의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저질 코미디

이다”, 총리께서 “예”라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길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저질 코미디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예”라고 잘못 하셨다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이…… 아직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가령 재원 조달은 어떨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는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를,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저질 코미디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번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번복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와 같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예”라는 말을 ‘아니요’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과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언제부터 무상급식 실시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2001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7년에 초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한나라당 시장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도 저질 코미디입니까? 김성태 의원……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무상급식을 전반적으로 반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여건을,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이고, 다만 거기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급식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작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데

에 지장이 되는 이런 언밸런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학교 시설, 비 새는 학교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지요, 아까 동료 의원 질의에?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비 새는 학교에 대해서, 50년 이상 된 학교 50개 학교에 대해서 3억씩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설 개선해라’ 했는데 150억을 전용을 해서 경남중학교 짓는 데 사용을 했어요. 감사원장으로서 또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어떤 사안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나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 신설비로 교부된 예산이 급식 쪽으로 전용이 되어 가지고 학교 신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비 새는 학교 50개에 대해서, 한 학교 짓는 데에 전용을 해서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춘진 의원 감사원장으로서 잘못 감사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이…… 지금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케이스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김춘진 의원 그러면 총리로서는 책임을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그게 불법적으로 예산이 전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한 이상 그것을 지적해야 마땅한 거고 또 정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저는 예방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난 1월 말 통계를 보면 8.5%로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2010년 통계를 말씀드리면 8.0%로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007년에 어느 작가가 자조적인 표현으로 쓴 책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에 붙인 그런 용어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당시 2007년 비정규직 급여 평균 117만 원 곱하기 20대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74%를 해서 산출된 88만 원을 빚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2007년은 청년실업률은 얼마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007년은 7.2%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이것을 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아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모든 문제를 글로벌 경제 위기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쪽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선 긴급한 재정 지원자금을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집행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른 선진국, 구체적으로는 G20 국가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다시 말씀드리어서 대량 청년실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장관님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930년대의 뉴딜정책과 같은 토목사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예컨대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고속철도의 건설이라든지 또는 조선에서의 플랜트와 같은 그런 엔지니어링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 건설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수행하는 신도시 건설사업 이런 등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뉴딜이라고 하면, 정부 재정지출을 주로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그런 정책 방향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 위기 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것이지 지금은 그런 수단에 의존할 필요는 없겠다, 민간 쪽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토목의 중요성은 뉴딜 당시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다, 또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춘진 의원** 필요성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데 고용유발계수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사업 분야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토목사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용유발계수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9.6 정도가 됩니다.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10명이 채 못 되는 그런 인력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물론 취업의 경우는 14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제조업 등의 고용 창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1980년대 후반에 비하면 지금 한 4분의 1 정도로 창출력이 낮아졌다, 반면에 서비스업도 함께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토목사업도 제조업보다는 고용 창출력이 더 높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사회복지 부분의 고용유발계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사회복지 부분의 고용유발계수는 제가 알기에 33 정도가 되는, 10억 원을 투입하면 33명 정도가 고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제조업 고용유발계수는 7.2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고용유발계수는 8.2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8.2라 하더라도 바로 사회복지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4분의 1……

○**김춘진 의원** 4분의 1도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9.9……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9.6입니다.

○**김춘진 의원** 9.6인데 이것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사회복지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가 또 선진국하고 산업구조를, 고용구조 등을 비교를 해 보면 제조업과 수출 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균형을 굳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좀 회복을 하자면 내수산업을 부추기고 또 서비스산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성도 제조업은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게 올라가 있는데 서비스업종은 생산성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산업고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지적해 주신 그쪽 부분에서 산업 부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고용비중은 어느 정도지요, OECD 평균하고 우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OECD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쪽에서 고용비중이……

○**김춘진 의원** 약 3분의 1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절반 정도입니다.

○**김춘진 의원** OECD 평균이 9.4인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OECD 평균이 24 정도로 제가……

○**김춘진 의원** 보건 및 사회복지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춘진 의원** 서비스업에서 또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이 9.4입니다, OECD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3.5%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5보다는 더 되고요, 저희가 전체 취업자 수 중에서 비중과 임금근로

자 수 중에서 비중이 있는데 임금근로자 수 비중은 7% 정도로 지난 3~4년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83만 명이었는데 2010년에 115만 명으로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임금근로자로 보면 한 7% 되고, 전체 취업자 수 중에서 보면 한 5% 조금 미달되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자료가 아마……

○**김춘진 의원** OECD하고 비교하는 통계 자료가 2010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005년 자료입니다. OECD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2005년도 자료입니다.

○**김춘진 의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ILO 기준에 의해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노동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알고 있기로 2005년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노동연구원에서 최근에 발간한 것인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고용 인원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체 취업자 중의 3.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게 보건·사회·복지 분야만 하면 ILO 기준에도 전체 고용 규모 중의 2.3%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통계가 조금……

○**김춘진 의원**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부 산하단체에서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김춘진 의원**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한 해 15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서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진 의원** 올라간다 할지라도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제가 비교해 보니까 2분의 1을 조금 넘어선 그런 수준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2분의 1이 조금 못 미쳤

는데요, 2010년도를 보면 2분의 1을 조금 능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저히 미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 쪽에서 굳이 말씀을 하시자면 서비스산업을 좀 진흥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산업, 관광이라든지 이른바 마이스(MICE)산업과 그리고 금융·방송·정보통신·법률·회계 이런 쪽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에서 간병·보육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고용률 차원에서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보편적 복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금 정책 구상은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병행하는 수준에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현재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 그래서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현재 OECD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출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그 부분 쪽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주무부처 쪽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7.5%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방비 부담을 좀 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국민소득보다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역시 복지는 국민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보편적으로 그 수준을 확대할 수 있고 질적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까 제가 답변을, 질문해 주신 것을 유심히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나라 등은 특수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썩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국방비를 많이, 국방비를 비교하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춘진 의원** 거기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와 같이 특수한 나라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그 사례도, 모집단이 20~30개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혁이나 특수한 환경 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미국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대만하고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복지와 국방 그런, 대만 역시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글썽요.

제가 그런 나라들과 하나하나를 비교하기보다는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가지고……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비용을 2배, 3배 씩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자영업자가, 저희들 비율이 2008년에 31.5%에서 작년에 상당히 줄어서 이십팔점 한 칠팔%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OECD 평균은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평균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2배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김춘진 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서비스산업 쪽에서 우리가 생산성이 낮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영세 구조를 가지고 있고, OECD 평균보다는 아마 농민의, 농어민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올리면, 음식 및 숙박업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율이 아주 높고 또 유통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거나, 말하자면 주주 형태의 자본 투자구조가 확립이 되어 있지 못한 것 등등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청년실업률 문제는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20세기형 산업사회형 물적 자본주의에 의지한 일자리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글썽요, 저희들이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서비스업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산업자본 자체가, 구조 자체가 좀 고도화가 되고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쪽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개혁,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정부의 투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 쪽에서의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현재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 7.5%인데 OECD 평균은 19.3%입니다. 민간부문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2.0인데, OECD 평균인 1.9보다 오히려 0.1%가 높습니다. 민간은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문의 투자 비중이랄까요, 지출 비중,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15년 정도 사이에 이미 출범시

켰던 사회복지제도가 아직 성숙 단계에 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그런 구조가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게 되면 지금 확립해 놓았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통계보다는 훨씬 정부 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라는 말씀 올립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3만 불 시대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만 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지금 전 국민 열 분 가운데 한 여섯 사람 조금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일곱 분 정도가 일하는 형태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만 전반적으로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3만 불 시대 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만 불이 2010년대 후반에 달성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중간쯤 이렇게 3만 불 시대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이면 줄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 총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진 의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는 인구구조에 관해서 말씀 올렸는데……

○**김춘진 의원** 인구구조도 우리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는 없어진다고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예측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산업구조라든지 일자리 정책 등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화된다고 해서 꼭 사회가 부양을

해야 될 대상이라거나 쓸모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특집기사로 다루었듯이 고령화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숙련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사회에 기여하는 면도 많고, 또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서 건강상태도 상당히 함께 나아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속 가능한 출산율이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부분은 제가 주무부장관이 아니라서……

○**김춘진 의원** 아니, 복지위 위원 했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김춘진 의원** 2.1이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1.2로 이렇게 낮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춘진 의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인구가 없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는 이런 추세가 선형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옛날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전이되었듯이 반드시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생태적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김춘진 의원** 1983년의 출산율이 2.1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했어요. 세 자녀를 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러한 저출산 국가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동의합니다.

○**김춘진 의원** 대통령께 건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십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많이 비교하시는 게 OECD 평균인데요, OECD 평균에 비하면 한 40% 수준입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의 국가 재정 능력이나 사회 지출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고 있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공공부문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공공부문 지출이요?

○**김춘진 의원** 공공부문이 OECD 평균의 얼마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OECD 평균의 한 3분의 1……

○**김춘진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런데요, OECD 평균을 단순 수치만 비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오전 답변에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2만 달러 시대 때에 국가 재정 중에서 얼마 정도를 지출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2만 달러 시대에 다른 국가들이 좀더 달랐습니다. 다 국가마다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많이 지출한 국가는 20% 넘긴 국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까 국방 지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7%인데 다른 국가 평균에 비하면,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되고요. 또 고령화 속도나 이러저러한 각종 제도의 성숙도를 감안을 하면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2만 달러에 달했을 때 정부 지출은 얼마나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정부 지출, 다른 국가…… 제가 정확히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춘진 의원** 43%가 넘습니다. 우리는 2만 달러 시대에 26%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김춘진 의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현재 지금 우리의 경우는 2만 불이고요.

○**김춘진 의원** 그러면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복지분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춘진 의원** 예, 사회복지부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사회복지분야 지출도 아까 일자리 창출, 고용유발계수의 보건복지분야 말씀도 주셨는데 복지부문의 어느 부문을 투자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쪽에 재정 투자를 늘리면 분명히 고용유발도 되고 합시다만, 그러니까 공공부조부문에 투자를 기형적으로 많이 늘리게 되면 분명히 경제에 부담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낮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현재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복지부문의 투자에 스타트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지난한 5, 6년 동안 복지 지출의 증가율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빨랐다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성장을 했지요? 거기에 맞게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70년대 오일쇼크 때문에 시작…… 그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많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어요.

○**김춘진 의원** 민주당의 의료정책에 대해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민주당이 내놓으신 무상의료의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무상의료라기보다는 보장성을 더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부담은 입원환자건 외래의 경우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상의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춘진 의원** 민주당이 어떻게 보도 자료 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 보장성을 지금 현재보다 입원의 경우는 10% 수준까지 낮추고 외래의 경우 한 60~70%까지 보장성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을 지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돼 있는 걸 100만 원까지 낮추겠다 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부담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진 의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공약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료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대통령 공약을 정확히는 기억을 하지

를 못하고 있는데, 보장성하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만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입원·외래 공짜, 중증환자에 대해서 입원·외래 공짜, 그다음에 백신 공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 세 가지 중에 필수 예방접종 지원하겠다고 한 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원님, 지금……

○**김춘진 의원** 집권당의 공약이 뭔지 알고 계셔야지요, 장관님께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원님, 지금 임기 5년 중에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보육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마 소득 하위 80%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100%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집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 공약하고요,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인수위하고 첫해에 다시 스크리닝을 하면서 그때 아마 80%로 확정을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건 아이사랑플랜이 2009년에 80%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지방선거에서 70%, 또 낮췄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썄요, 국가재정 상태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속도 조금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2008년도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입원환자까지 10% 오히려 올렸어요. 집권하자마자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약이 한 달이면 몇 번씩 바뀌는 겁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가격 탄력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이 0.3부터 심지어는 3까지 예측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적인 수치와 종합해 볼 때 최소한 무상의료로 갔을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최소 1 아니면 1.5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가격 탄력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가격 탄력도는 보장성을 확대하거나 만약에 무상의료로 갔을 경우에 의료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그게 가격 탄력성이지요.

○**김춘진 의원** 이것은 1.5가 50년 전 미국의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가 아닙니다. 또 1971년부터 1982년까지 랜드연구소에서 12년 동안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격 탄력도가 0.2로 매우 낮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대한민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은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de), 아주 일부만 의료보험을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가격 탄력도가 매우 높을 때에도 0.2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 랜드연구소 연구·분석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스크리닝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1~1.5로 판단하는 근거 중에는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만 갖고 참고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의료급여 환자들, 그야말로 무상의료를 받고 있는 대상인데 그분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들보다 의료 이용이 무려 3배에서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취약한 계층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의료 이용률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춘진 의원**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들이 일단 의료급여 대상자지요.

○**김춘진 의원** 차상위자는 안 들어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차상위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하다가 지난 정부 때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했지요, 물론 이제 의료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김춘진 의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취약계층은 이미 다 무상입니다. 암 환자도 현재 5%에서 10%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게 늘려 봤……

○**김춘진 의원** 건강보험이 현재 5%, 10%일 때 암 환자는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10%까지 낮추겠다고 한 겁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의원님, 제가 갖고 있는 수치는 5%에서 10%로 늘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부담……

○**김춘진 의원** 현재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암 환자의 경우도 수십 배로 늘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5~10%입니다, 현재 부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암 환자는 아무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임상……

○**김춘진 의원** 또 의료급여 환자도 무상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임상 통계치로 암 환자의 자기부담을 반으로 낮췄을 때 수십 배가 늘어났습니다, 의료 이용률이. 그것도 제가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암에 걸리면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물론입니다.

○**김춘진 의원** 당연히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현재 5%에서 10%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래서 10%로 낮춰도 암 환자는 낮추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런데 의원님, 상식적으로 의료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가벼운 질환, 자가 치료가 가능한 질병도 아무래도 병원에 가게 되고 의료이용률이 높아지는 거는 거의……

○**김춘진 의원** 민주당 공약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입원환자가 10% 부담하는 거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의료가 아니지요, 의원님.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김춘진 의원** ‘실질적인 무상의료’라고 했는데 언론이나 여당이나 정부에서 ‘무상의료’라고 한 겁니다. 장관님께서 ‘무상의료’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썄, 의원님, 실질적 무상의료와 그냥 무상의료의 차이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실제 10% 부담하는 것이 무상이라는 뜻이지요,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보장성 강화 및 실질적인 무상의료’라고 저희들이 냈는데 그걸 갖다가 ‘무상의료’라고 한 것이 여당입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니, 보도자료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 다시 또 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입원환자가 1% 보장률을 높이는 데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돈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제가 그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전체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죄송합니다. 각각에 대한 수치를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김춘진 의원** 아니, 민주당의 공약인데 여지껏 검토도 안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민주당 공약……

○**김춘진 의원** 민주당이 10%로 낮추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부담률을. 그러면 전체 볼륨이 얼마인가는 알고 있어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썄, 민주당에서는 가격 탄력성을 그냥 0으로, 그러니까 무상의료 하는 경우에도 더 의료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을 걸 전제로 해서 8조 1000억 이렇게 추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방식……

○**김춘진 의원** 이게 지금 2009년도 통계입니다. 입원환자가 13조 7000억을, 전체 볼륨이 13조 7000억입니다. 그중에 8조 50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8조 5000억 부담한 것이 보장성이 61.98입니다. 그래서 현재 1300억 정도만 부담하면 보

장률을 1% 높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2조 3000억이면 9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 탄력도를 제외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을 0으로 하신, 전제하신 거지요. 그 점,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추계치가 나오는……

○**김춘진 의원** 가격 탄력도가 랜드연구소는 0.2란 말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보험제…… 거기에 대한 비교·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거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랜드연구소의 경우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마 추계를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랜드연구소 분석 결과를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역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가 가격 탄력도가 더 낮습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고 그 당시 미국은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가 아주 열악할 때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노인의 86.9%가 한 달 이상 치료하고 있어요. 진료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진료비가 높은지. 노인이 쓰는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런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진 의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저희들은 사실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일단 질환에 걸리고 났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추진도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진 의원** 노인은 대개 만성질환이 많지요. 그러니 급성기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이 오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알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 나오십시오.

잘 들으셨지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 분야가 고용창출률이 높다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저 남쪽, 석유도 난방비도 필요 없고 곡식도 풍족한 나라라 하면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하에서 남다른 국가발전 동력을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남다른 이런 신성장 사업을 창출한다든지, 그래서 R&D 투자도 더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사정이 있다 하는 것도 저는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이제는 서비스 업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김춘진 의원** GDP 중에 57%가 대한민국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OECD 국가는 72%입니다. 바로 서비스 업종에 투자를 해서 인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도 경제성장의 일환입니다. 이걸 결코 소모성 돈이 아닙니다. 경제성장과 인적인 투자는 융합적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고 그

쪽이 고용창출률이 높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출의존형의 경제 구조를 가진 이상은 수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하는 노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이런 형편에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지금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 산업이 발전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정말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의 조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은 세계 1등이면 전 세계 시장에 내다팝니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 키우는 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적인 것에 투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아이들 출산율 낮지 않습니까? 바로 아이들 낳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돈이 들어서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2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누가 아이 낳겠습니까, 88만 원 월급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이 가운데 보육, 그다음에 아이 교육 시키고…… 대학 등록금 반값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견해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밥 먹이는 방법도 투자지만 그러나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보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인적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투자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이는 데만 솔직히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학생들 질을 높여서 그야말로 인재를 양성하자, 뭐 인재

를 양성하자는 측면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이나 저나 같습니다.

○**김춘진 의원** LH 본사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큼 진척되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도 지금 금년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지역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지역의 합리적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다음 단계로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헌법 120조와 123조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의원** 어느 도가 더 못사는 도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경제지표상으로는 경상남도 보다는 전라북도가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헌법정신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새만금사업은 총리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70%의 부지를 조성을 하고 또 그 이후에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또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대책도 지금 아울러서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새만금개발청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새만금사업에는 정부의 6개 부처가 관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실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인 청을 뒤 가지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난번 과학기술기본법 처리할 때 불과 일주일 만에 직권상정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춘진 의원** 15일이 지나야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하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직권상정할 것을 중용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김춘진 의원** 만일에 그랬다면 잘못된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도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문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난 2월 28일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위헌신청 제청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행정법원에서 법관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사교육비 통계 발표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진 의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교육비가 2010년도에 총규모로 7500억 원 정도가 감소했고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00원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사교육비가 즉 증가해 오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10% 이상 두 자릿수로 증가해 왔습니다마는 2010년에 최초로 경제위기 시가 아닌 기간 동안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방과후학교 지출은 포함하지 않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방과후학교

지출은 기본적으로 학교 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교육비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3000원이 늘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마 1000원 정도 규모가 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2008년에 1만 1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아마 2009년 대비 2010년 증가가 1000원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입학사정관제 컨설팅비도 안 들어가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학원 관련된 법률에 컨설팅을 지도하는 활동도 학원의 활동으로 포함시켜야만이 저희들이 적절한 규제도 할 수 있고, 또 통계에도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신종 사교육시장의 사교육비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춘진 의원** 사립대학교 적립금은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특히 건축적립금이 지금 한 50% 되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적립금에 대한 회계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회계하고 기금회계를 분리해서 하도록 했고, 또 감가상각제도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도입했고, 또 투자유가증권의 시가 평가를 평가이익과 손실을 시가로 평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장학금 부분이 지나치게 작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적립금이 건축에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지금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방교육청과의 관계는 원만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방교육청과 교과부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같이 합심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간접 체벌, 또 광명시와 같은 데는 평준화지역 확대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간접 체벌 부분은, 저희가 직접 체벌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을 추진 중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체벌을, 그러니까 훈육적인 차원, 소위 교육벌이라고 합니다마는 학교 교실 뒤에서 있게 한다든지 운동장을 걷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훈육적인 차원의 체벌까지 금지할 경우에는 교사 분들이 학교 훈육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장의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청의 요구도 수용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절충적으로 보다 균형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보다 좀 더 큰 틀에서 학교문화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좀 활성화해서, 예컨대 졸업식 같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졸업식에 공연이나 작품을 전시하게 한다든지 졸업식 과정을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공동체 책임의식도 기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딱딱한 교실에서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체험 중심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학교 주변의 어려운 지역에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아버지회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산행을 같이 데리고 가서 멘토 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를 학교문화 선진화라는 틀에서 해소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잘 협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평준화지역 확대 지정 거부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감님들께 평준화의 지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입법예고가 들어가서 법제처 심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평준화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 부족으로 판단을 해서 판정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 거부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저희가 두 학교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언론 보도 등이 있어서, 아마 네 학교가 그런 민원 제기가 심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특히 두 학교의 경우에는 선정 절차의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갈등을 키우지 말고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교과부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좀 더 확장해서, 또 더 많이 소통해서 저희 교과부로서는 조정 역할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에리카 김이 한상률 전 청장과 같은 시기에 온 것은 우연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우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에리카 김이 수사를 피할 고의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동안에 미국에서 에리카 김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호관찰이 끝났기 때문에 사전에 검찰에 연락을 해서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일부는 시효가 완성……

그 시효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시효로 보면 일부 지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김춘진 의원** 김병준을 추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김춘진 의원** 김병준 추방, 외국으로.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 예, 지금 현재 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추방할 의사가 있으시나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시중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신 김병준을 국외 추방시키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는 그것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법무부장관님께서 정말 정의롭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는 교육비 지출 격차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교육격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고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받은 고통과 가난을 대물리지 않겠다는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통계가 줄었다며 국민을 기만했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천문학적 등록금과 수도권 전세 난의 후폭풍으로 인한 기숙사·하숙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안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아 외형 치장에 열을 올리는 사이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 개정 없이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법상 숙려기간이라는 15일이 채 지나

지도 않은 법안을,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 국가 과학기술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를 무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할 정부가 교원평가제, 인권조례 제정, 평준화지역 확대 등 사사건건마다 교육감과 부딪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현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과 교육현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도 교육감과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학교 교육현장과 교육청 교육행정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이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이루어져 국민에게 희망의 교육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의지 부족과 불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무신경한 대응으로 결국 예금자들만 피해를 보게 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불과 9년 전인 2002년 김해공항 주변에서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상을 입었던 중국 민항기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악천후 속에서 공항 인근의 신어산을 우회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산과 같은 장애물이 항공기 운항 안전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나 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남권에는 김해 사천 대구 등 7개 공항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나름대로 동남권의 관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의 600여 세대의 소음 민원 문제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 공항 주변의 지형 장애물로 인해서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조차도 2024년이 되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90년대부터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김해공항의 포화 시는 20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또 각국 간의 FTA 체결 및 항공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권 항공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항공 수요 증가량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북경 상해 광주 등에 세계적인 허브공항 구축계획을 세우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평도 피격 사태에서 보듯이 비상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되고 또 10여 년 뒤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의 항공 수요를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도 제2 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인천공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추, 소위 허브공항이고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지역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 공항으로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말이면 입지 평가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현재 이와 관련해서 입지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만들었습니까, 이전에 인천공항에 적용했던 기준을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인천공항과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에 합당한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어떤 여건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사정이라든지 또 경제적·사회적인 여건이 인천공항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金世淵 議員** 뭔가 지금 밝히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위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절차, 내용을 제가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께서 지금 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世淵 議員**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운영 방침을 위원회에 지침을 세워서 전달하셔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 그냥 일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여를 하고 또 제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24시간 운영 가능해야 되고요, 또 안전성 측면에서 최소한 김해공항보다는 입지조건이 더 나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金世淵 議員** 자료화면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인천공항을 예로 드는 이유는 당시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종도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때 서울로부터의 접근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매립으로 인해서 침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도로 최종 입지가 결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모든 논란이 되는 사항을 종합을 했을 때에 공항의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다른 후보지보다는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영종도가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소음 민원으로부터 벗어나서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이유가 제일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議員** 인천공항이 현재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올바른 입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렇다면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 역시 인천공항 입지 선정 당시와 같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또 효과성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공항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입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남권신공항에는 그 특색에 맞는 공항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다만 인천공항의 사례도 또 외국의 사례도 참작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천공항이 접근성이라든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께서는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데 안전성하고 경제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느 쪽보다도 그런 요소들

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가령 경제성을 우선시해서 안전을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서 큰 사고 요인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아니지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되겠지요.

○**金世淵 議員** 그러면 지금 국제공항을 그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을 우리가 입지 결정할 때 적용했던 기준에서 지금에 와서 그 기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특정 입지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이런 문제인 만큼 결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평가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공항 입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절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면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이 절차를 공개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평가기준도 공개되어야 되고 그리고 절차도 공개되어야지,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모든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적어도 평가기준은 공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최종평가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상당한 부작용이랄까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완료가 되기 전에는 평가기준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는 과정과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탈락된 지역의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러한 문제들이 연루되

어 있는 문제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도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 절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지금 총리님 말씀을 듣고는 저부터 지금 충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관계된 분들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이러한 절차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챙기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다음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世淵 議員**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예금 인출을 받으려고 저축은행들에 몰려든 예금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금융·경제 문제를 넘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산지역만 해도 인구 10분의 1에 육박하는 30만 명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축은행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러한 대주주·경영진의 책임이 제일 크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저축은행 제도 설계 내지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 감독에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못했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사전적인 관리 감독도 부실했지만 특히 사태 발생 초기의 대응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지난 12월 말 기준 BIS 비율이 5.13%입니다.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인 5% 미만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스스로 마련한 이런 지도기준을 상회하는 저축은행이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엉터리 제

도하에서 허위공시로 예금자들을 속인 결과가 되었고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를 조장한 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BIS비율이 5%가 못 되면 영업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이 5.13%로 지도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예금 인출이 지속되어 가지고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러서 예금 지급 불능 상황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는 그 요건이 관련법에 영업정지에 해당이 돼서 영업정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13이 과연 정확한 건지 어쩐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이것을 속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았는데 1월 달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예금이 인출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저축은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 과정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일구어온 또 책임 전가를 통해서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금융위원장은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키면서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고 조치 당일에는 상반기 중에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을 했지만 불과 이틀 뒤에 계열은행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를 믿은 서민들만 낭패를 본 것입니다. 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부 입장이 수차례 뒤바뀐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번복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가 며칠 뒤면 밝혀질 사항을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에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이 그렇게 인출돼서 부산하고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영업정지를 두 은행에 대해서 할 때도 정부는 'BIS 5% 이상 저축은행 94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 94개가 아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라든지 그밖에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발표할 때는 BIS비율이 5% 미만인 10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했지만 이 10개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영업정지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혹시 조만간에 사정이 변경될까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영업정지를 할 수도 없고 또 영업정지가 실제로 해당이 될 만한 요건이 조만간에 충족이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3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다, BIS비율 5% 미만이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언론에서는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었고, 나머지 7개 은행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이 되었지 않지만 앞으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영업정지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거지 그게 국민들을 속이거나 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괜찮은 저축은행도 갑자기 예금 인출이 되면 운영에 어려워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을 선제적으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업정지를 하면 또 위법한 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서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칙적인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돌발적인 사정이 생겨 가지고 부산 지역의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

지 혼란을 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언론 보도 헤드라인과 간단한 요약 등 기사 정도를 보고 개별 예금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정도 설명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다했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준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를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이상 저희 쪽에, 정부 쪽에서도 좀더 치밀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시다시피 5000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고요 또 가지급금을 종래 1500만 원 하던 것을 500만 원 늘려서 해서 예금자 손해를, 가급적 불편을 줄이려고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世淵 議員** 그 과정에서 예금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서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스스로 손실을 입는다’ 또 ‘과도한 예금 인출이 이어지면 당국도 대책이 없다’, 사실상 예금자들이 협박을 당하는 듯한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발표할 때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는데도 금융위원장은 고사하고 어떠한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분들이 현장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금자들을 안심시켰더라면 조금이라도 사태가 나아질 수 있었을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월 17일, 18일 이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부산·대전 영업정지 조치 후에 부산 계열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긴급자원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으로서도 좀 어려운 것이 이게 당장 영업정지 요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로 해서 영업정지가 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계열 은행에도 미친다 하는 것은 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그런 사실을 또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것은 은행 측 입장에서 보면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요건에 해당이 되는 양 설명하면 또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금융당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이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금자들한테, 아시다시피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약정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저축은행으로서도 영업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불안해 가지고 인출하면 괜찮은 은행도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예금자들한테 손해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정을 설명한 것이지, 예금자들을 협박하거나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금융당국으로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지만 또 금융위원장이 2월 22일에 부산의 한 저축은행에 대리인을 보내서 2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맡기려면 최소한, 최소 보장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맡기지 않고 2000만 원을 맡겨 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행각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금융위원장 보고도 자세히 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저희로서도 일단의 책임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본인한테도 했고 본인도 공감했고 그런데, 여하튼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한 은행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의 경우 그러한 저축은행들이 몰려 있어서 결국은 부산 쪽에서 큰 혼란이 생겼던 것, 그건 정말 한

편으로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래서 금융당국의 신뢰 실추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런 행위를 한 당국의 책임자로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경질 건의를 대통령께 하실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새 금융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저축은행 문제를 이와 같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과단성 있게 처리한, 업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시다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만을 가지고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묻거나 그럴 사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이 정도 사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규명해야 되고 이번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교과부에서는 지금 ‘기회균형 선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世淵 議員** 현재 20억 상당 아파트와 30억 예금을 가지고 있지만 월 급여는 1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이 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저희 의원실에서 전 중앙부처를 상대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56개 사업 중에서 무려 20개 사업, 예산으로는 3조 5000억 원 중에서 1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복지부 아동 및 장애인 지원 예산이 1조 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00년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때 통계 규정으로 나온 것이 그다음에는 지원 근거 규정으로 2006년도부터 바뀌면서 이러한 모호한 규정이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기준으로 지급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뭔가 근본적으로 더 세밀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기준을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아주 편의주의적이고 책임 회피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비수급자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방법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결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 지원과 관련해서도 재산보다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맹점이, 불합리한 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더 정치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단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비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개념 폐기하고, 이렇게 허술한 복지제도 전반을 손질을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世淵 議員** 우주시대가 곧 개막될 것이라고 보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世淵 議員** 우주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

○**金世淵 議員** 2020년도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주개발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막연히는 알고 있습니다. 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金世淵 議員** 공교롭게도 2020년을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이 달에 유인 또는 무인 기지를 건설하는 그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나 로봇이 가서 기지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자체 발사체 위성을 간신히 쏘아 올려서 정지궤도 위로 올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교과부에서 나로호 2호 자체 발사체 개발 예산 1004억 올리니까 기재부에서 깎여서 315억 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나로호 발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실패함에 따라서 우주사업 전반에 걸쳐서 재정립하고 발사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돼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주개발은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분야고 국가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쟁력 확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이걸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워낙 여러 번 들어서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정도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새롭게 개막되는 우주 시대에 선발 국가군에 못 들어가면, 지금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새롭게 세계질서가 재편될 때 핵무기·미사일을 가진 국가들이 후발국가들을 봉쇄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질서를 새롭게 주도하는 입장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오를 다시 범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국가는 현재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범부처 공동으로 수립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주기술은 타 분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또 연관이 돼 있고 국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제가 바라는 것은 똑같이 들던 답변이 아니라 총리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끌고 나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알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다음은 원자력 비발전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 등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첨단소재·에너지 등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는 비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실제 방사선 기기의 세계시장 규모가 2008년도에 55조 원, 연평균 17%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입자가속기 또 연구용 원자로 건립 등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계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개발해야 될 전문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양성기관이 없습니다.

비발전 분야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첨단 방사선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서 인재 양성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도 비발전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재 양성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양성기관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전 단계로서 기왕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독립된 양성기관도 만드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녹색성장 기술의 대표적인 원자력 기술 중에서 발전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원자력 비발전 분야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반드시 체계적인 인재 양성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金世淵 議員**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하면 협동조합이 책임지고 팔아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제대로 시행되려면 농협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됨은 물론 세계 등의 분야에서 지금보다 불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한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자본금 지원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보험특례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농협법의 개정이 그야말로 농촌을 살리고 또 농협이 제대로 농민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그런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문제, 세제 문제, 보험특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농협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신공항 입지 문제 그리고 저축은행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의 김을동 의원입니다.

이번 겨울, 우리는 유례없는 한파로 힘든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했던가요? 1980년 서울의 봄이 봄이 아니었듯이 2011년 대한민국의 봄 역시 봄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구제역으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토가 사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이제는 생수조차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서민의 보금자리 전·월세값 폭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비아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까지 예상되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채무가 392조 원입니다. 가계부채도 795조 원을 넘어섰

습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와 무상보육까지 하겠다며 인기영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확대하기는 쉬워도 축소할 때는 엄청난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든 야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만을 내다보고 오로지 민생 우선의 정치만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용과 실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어제는 제92주년 3·1절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신 독립선열들의 영전 앞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독립에 역행했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처단과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일류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4월에는 역사교과서에 이어 지리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겠다고 합니다.

나라 안의 사정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술국치 100년의 마지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가가 어렵게 환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재산 320억 원을 다시 그의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친일역사 청산의 염원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죄스러운 마음에 순국선열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나라 안팎에서 민족적·역사적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은 제 나라의 역사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존속케 하고 결속시켜 주는 민족의 혼이고 열입니다. 한국사 교육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국민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2009년 12월 한국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발표되자마자 저

는 6세부터 국사교육을 의무화한 프랑스보다 더 이른 5세부터 모든 교육과정과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6종 법안을 제출했으며, 또한 지난해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한국사 교육의 필수화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들을 제출하셨으나 그 법안들은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한국사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들부터 술선수범하여 민족적·역사적 정체성 바로잡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가 341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8명이 사망했고 피해액만도 3조 원입니다.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조차 식상할 정도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정부는 지금까지 쉬쉬하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탓 내 탓 하면서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 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부터 묻겠습니다.

매몰한 지 두 달이 넘으면서 침출수가 제일 걱정입니다. 빗물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침출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되풀이되는 무슨 웅벽이니 또 차수막이니 방수포니 하는 그런 임시방편 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선 현시점에서 침출수 유출 및 붕괴·유실 우려가 있는 매몰지 처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차수벽·웅벽 설치 등이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건 미봉책이다,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환경부가 2008년에 한 대학 연구팀에 의뢰한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관리방안’ 보고서입니다.

저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감염된 동물사체 매몰시에 침출수와 함께 병원균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진국처럼 소각해야 되고 또 만약 매몰 시에는 매립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침출수 방지비닐도 일반쓰레기가 아니라요, 확실한 방수가 되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비축했다가 사용하도록 했고 매몰지 옆에 침출수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침출수를 따로 옆에 모으도록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3년 전에 1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것 현재 거들떠보지도 않고 용도폐기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의 방향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정부가 예산 낭비하고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에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또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등 정부의 매몰지 관련 매뉴얼을 그것에 기해서 2009년 12월 그리고 2010년 10월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매뉴얼에 반영을 했고 또 이번에 매몰하는 과정에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많이들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구제역 현장조사 나갔었습니다. 매몰현장에 나가 본 결과 부실 그 자체입니다.

저 자료화면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첫 번째 사진은 정부에서 제시한 가축매몰지 모식도고요, 또 옆의 사진은 2월 22일에 경기도 양주의 한 농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매몰지는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식도에 있는 가스배출관 있지요? 그것하고 침출수 배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매몰지입니다.

2월 21일에 방문했을 때는 비닐이 그대로 노출되고 위에다가 슬쩍 흙만 덮어 가지고 방치돼 있다가 그다음에 다음 날에 1.5m의 봉분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가스배출관도 추가로 거기가 대충 막아 났습니다.

그런데 배출관에 이렇게 U자형의 마개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뉴얼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거의 매몰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런 부실 매몰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매몰지에 침출수 유공관을 나중에 새로 박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빗물이 매몰지로 스며들어서 침출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특히 이런 부실 매몰지하고 대규모 매몰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 그러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자료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몰지 한 3m나 5m 옆에 매몰지 깊이의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침출수 저장용 정화조를 설치하자, 그래 가지고 저쪽에 있는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매몰지와 정화조 사이에 유공관 파이프를 설치해서 매몰지 안의 침출수를 정화조로 뽑은 다음에 1차 살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뇨차량도 소독 처리를 해서 가축분뇨처리장까지 옮겨서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저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를 나름대로 매뉴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의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금년에 한해, 한파로 인해서 실제로 매뉴얼대로 행해지지 못한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이전에 완전히 해동이 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 매몰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하여튼 3월 안에 모든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를 빼내고 또 침출수를 뽑아내는 이러한 장치들이 일부 부실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케이

스를 다 망라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취지가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방법도 깊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침출수를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이미 위에다가 덮은 데는요, 거기다가 헤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박아서 밑으로 해서 뽑아내서 거기다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응은 전부,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는 관은 박혀는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거기가 나중에 지금 상태로는 박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뽑아내자 이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들어가시고요.

환경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환경부 설명대로 상수원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는 정화할 수 있다고, 화학적·물리적 치료를 해서 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하고 생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구제역, 조류독감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생수공장 주변의 구제역 매몰지를 조사했더니 14곳 중에서 8곳에서 이런 매몰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포천 한 생수공장은 자료화면처럼요, 이렇게 1km 이내에 매몰지가 서른일곱 곳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장 옆에, 축사 40m 바로 옆에서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몰지에서 가까운 생수공장이 1km 이

내에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 정에서의 거리는 좀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네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수에서 원수 즉, 대수층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매몰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매몰지가 잘못되었을 때 지하수로 오염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제대로 매몰을 했으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은 없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즉 설명드린 바와 같은 방식으로 침출수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이유는 만일 제대로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대로 되었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원님께 한마디 꼭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몰을 한다고 해서 침출수가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라 하고 오해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정말 표현 그대로 오해이고요, 제대로 된 곳은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물며……

○**김을동 의원** 예, 그런데 현재는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하물며 생수공장의 경우에는 지하 암반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병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사가 가까이 있다고 해도 또는 매몰지가 가까이 있다고 해도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나 국민들이 걱정할 것이고 오늘 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더 해 보고 만일 국민이 안심하고 쓰고 있는 생수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판매 보류라든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을동 의원** 그런데 축사 바로 40m 옆에서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위험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원래 축사 옆에는 이런 것이 설치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전문가 용역 지침에 보면 3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것이 4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100m 떨어진 곳이 취수정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 올린 것처럼 보통 침출수가 땅속에 묻혀 있는 폐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는 해도 우리가 물의 분류를 따질 때는 그것이 암반 대수층의 생수원이 되는 지하수로 보지 않고 일종의 변형된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사라든지 매몰지에서 생수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고 또 지하수를 바로 자가 수도 형식으로 채수해서 드시는 농민들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매몰지는 물론이고 매몰지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와 같은, 만일의 경우에 잘못 매몰된 것으로 인한 오염된 식수를 드시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동 의원** 예, 계속해서 지하수 수질을 갖다가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을동 의원**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침출하는, 물을 뽑아내는 데서 바로 옆에 반경이 40m, 3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깝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침출수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일 매몰지마다 침출수가 지하수나 토양의 오염원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매몰지의 침출수는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오염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라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문화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김을동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현판에 한자보다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글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를 복원할 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학술적·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복원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그것을 가지고 우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광화문을 복원하는 기준을…… 고종 때 1864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완벽한 고중에 의한 완벽한 자료에 의해서 복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국민적 여망이나 문화도 함께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광화문 현판에 대해서 광화문이 창건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 현판을 우리의 상징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대서예가의 글을 통해서 현판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런데 중국의 천안문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한자도 쓰여 있고 만주어로도 쓰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만주어가 지워지고 한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은문도 맨 처음에…… 독립문을 세우면서 우리 한글로 바꾸어서 새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최근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인 복지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부장관님의 입장,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관련 법안도 발의하셨고,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 최고은 씨의 사건은…… 이 시대 우리나라의 이런 형편상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미 2년 전에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인의 현황을 보면 전

체 예술인들의 80%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연극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월 소득이 25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야가 합의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으셨고 또 여야 정책위 의장의 합의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정부 관계부처 간의 실무협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다른 사회보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고용보험법이라든가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이견이 있었고요. 또 기재부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불란서의 엥페르미땅 제도라고 해서 지금 이 제도를—예술인 복지제도를—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KSK라고 해서 예술인 사회보험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여야 없이 함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가지고 이 법안을 성안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 4대 보험 적용은 예술인 복지법을 조속히 통과를 시키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간접 지원을 우선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또는 스태프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는 직접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약 700여 명이 직접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지원을 하되 인건비로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보장을 해 준다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지원 중심으로 했는데 최소한의 등용문이라도 만들어 주고 최소한의 것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수 작가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작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양성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이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작사와 또는 방송사 또는 영화사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제정이라든지 인건비는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그런데 문제가 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불란서의 앵페르미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를 수여를 하고요. 다른 일반 예술인들과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수급 자격·기간·금액 등의 기준을 조금은 낮추더라도 최소한의 것을 지원을 하는 특별실업보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을동 의원**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감사합니다.

○**김을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도 오히려 해병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감격이 솟구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과 사회지도층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희생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국민 여러분께 오히려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재봉춘(再逢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항상 봄날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최근 복지 논쟁이 활발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나 여야나 다 좀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작년 말 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복지 시스템은 저부담·저예산·저보장의 트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쪽 기초생활수급제도, 반쪽 고용보험, 반쪽 국민연금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복지국가는 힘들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목표인 것이지요.

야당의 주장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해 놓고 또 재정에 대한 대책도 좀 미흡한 상태로 무상 시리즈만 이야기를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팍팍한 국민들의 삶, 곳곳이 부러져 있는 기회의 사다리, 튼튼하지도 촘촘하지도 못한 복지 그물망의 현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개선해야 될 과제이고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보장할 것인지, 어떤 복지

가 더 절실할 것인지, 어떤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 말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높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업급여의 경우 말합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실업수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마는 서구 복지, 특히 북구라파의 경우는 칠팔십프로 수준인데 우리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OECD 30개국 중에 27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식 의원 굉장히 낮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아서는 생활하기가 어렵지요. 국민연금 대체율도 매우 낮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식 의원 이렇게 볼 때 더 노력해야지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국민들이 좀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취지를 선해(善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예. 그렇게만 입장을 말씀하시면 오히려 어떤 한건주의식 무상복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더 국민들 가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항상 부족한 점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감입니다.

○김성식 의원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김성식 의원 지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어려운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 400여 만……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한 400여 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물을 닦

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부양의무자 기준 또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엄격한 요건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김성식 의원 차상위를 제외하고도요 한 400만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연금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하는 사례라든지 또 납부 예외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연금제도가 아직은 구축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 무려 640만 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고인이 되셔도 국민연금을 탈 수가 없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중에 기초노령연금 올려 달라, 기초생활수급자 더 넓혀 달라 이런 요구가 생기면서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감입니다.

○김성식 의원 지금 근로빈곤층이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빈곤층이 약 195만 명이라고 그러합니다. 주로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인데요.

그 중에 10명 중의 9명은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조차 못 받고 있고요. 4명 중의 3명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서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식 의원 고용보험도 한번 보십시오. 실직을 했을 때 실업수당이야말로 생명 줄과 같은 것인데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의 경우는 41%에 불과하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75%,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0%,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6% 해서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실업해서 닥치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생활상의 수요별로 복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식 의원** 1400만 임금근로자 중에 400만이 사각지대이고요, 자영업자 중에 영세자영업자는 실업부조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총 800만 정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편적 복지나, 맞춤형 복지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논쟁은 참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기본 틀을 나눠 보면 대체로 어떻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그리고 기타 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부조는 그야말로 절대빈곤이나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서 도와주는 복지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는 주로 사회보험 제도 관련된 것이고, 기타 복지 서비스는 이것과 벗어나서 주거, 의료, 교육, 금융 각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시스템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모든 계층이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보제도, 그리고 복지 서비스는 당연히 맞춤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이냐, 맞춤형이냐의 논쟁은 참으로…… 오히려 고용보험 사각지대, 또 여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좀 논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모두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이야기했는데 별 진전이 없었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종합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미래 세대 역량 강화 지원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식 의원** 총리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 보고서를 제가 다 보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화하겠다’ 이런 표현만 있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분적으로 증가되고 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식 의원** 저는 이제까지 정부가 한 정도의 모습으로는, 역대 정부도 그랬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관련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 총리 취임 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총리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연결선상에서 주요 정책도 보고를 받고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성식 의원** 공공사회 복지 지출의 목표, GDP 대비입니다. 그 보고서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김성식 의원** 12.1%로 나와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12.1%……

○**김성식 의원** 2013년에는 12.1% 정도로 늘려 보겠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도 수치는 6.8%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도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되게 되어 있고 총리께서 위원장이신데요. 그 장기 계획에는 12.1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중요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6.8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2.1% 수치는 2013년에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 수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한 추정치고요. 그리고 같은 계획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국가재정운

용계획에는 또 9.95%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10월 중기재정계획상에는 7%,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든 간에?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9.95%, 12.1%,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건데 그것은 사실상 2007년에 검토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김성식 의원** 총리님, 그런데 설명을 제가 대충 이해하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7%는……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재정계획과 사회보장 장기계획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또 부처별로 여러 가지 복지 계획을 짤에 있어서 종합화하고 또 예산 배정까지 해 들어가는 책임 있는 차원까지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지금 양쪽에 차이가 났던 것은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다른 뒤쪽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아주 엄밀하게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또 앞에는 상당히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이 정확히 합치되어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복지에 관한 대책이,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성식 의원** 실제로 재정 집행은 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 중심으로 되는데요. 그만큼 종합적인 복지 계획, 몇 년간 체계적으로 반영할 복지 계획 예산 플랜이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고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총리께서 어차피 위원장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셔서 철저한, 단계적인 복지 확대 플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국민 앞에 내놓을 때 국민이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안이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 취임을 해서 우선 복지에 관해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많은 부

처에서 벌이는 이런 복지 정책이 서로 중복되고 또는 사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각 부처 사람들을 모아서 TF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상반기까지 실태 분석을 하고 그 실태 분석에서 나타나는 사각의 문제, 중복의 문제, 기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망라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바탕 위에서 올바른 복지 정책의 플랜을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총리께서 한 가지 좀 국민을 생각하시면서 명심하셔야 될 사항은 모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생색이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이것을 책임 있게 잘 안 합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밑 빠진 구멍을 남겨 놓고서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김황식 총리님께서 총리 시절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생각하시고 관련 장관들과 더불어서 책임 있는 계획을 내시도록 업무에 대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복지가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합당한 복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복이나 낭비되는 요소가 뭔지도 밝혀서 그런 부분은 줄여서 아끼고 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세부담이나 기타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겠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좋은 복지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은 무상 100% 식의 복지 시리즈보다 더 절실한 것이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시스템부터 보편적 복지를 완성하는 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복지 부담 수준 문제의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확대에 정

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 복지에 대한 현정부의 신뢰가 확실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감세 논쟁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감세라는 것은 지금 속칭 말하는 부자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감세에 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더 촉진해서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복지로 연결되는, 결국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그걸 복지비용으로 돌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고 또 불필요한 비과세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세원을 더 발굴하고 공정과세를 통해서 세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확보된 세입을 더 복지에 투입을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복지사업 중에서도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 부분을 줄이고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조로 하고 그다음에 적정 세율이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복지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의원** 오늘 총리께서 발언하신 것을 듣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현 정부가 내년도에 단계적이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인식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25%~22% 까지 법인세를 깎아준 마당에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들보다도 재정과 조세는 성장 문제 플러스 복지 문제를 함께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한 정부 내 입장 조정을 하셔서 그 재원부터라도 착실하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심각한 문제점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뭐부터 어떻게 없애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총리님께 질의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

비수급 빈곤층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지금 103만 명 규모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복지의 사각지대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위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뒤야 될 그런 시급한 계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저소득층보고 가난한 사람을 부양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정도로 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약 10만 명 이상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로 편입될 수가 있고 본 의원의 계산 또 보사연의 참고자료를 통하면 약 삼천이삼백억 정도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의 반영을 위해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해내실 각오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보다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에는 상당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대상자 수도 한 10만 명 또 한 320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런 노력들이 현실화될 때만 조금 정략적인 복지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부정수급의 문제라든지 중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전달체계 효율화·합리화도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와서 현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서 최소한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더 좀 해소할 수 있는 여유랄까요, 여력이랄까 이런 것을 갖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640만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자, 줄고 있지 않지요? 10여 년 동안 비슷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납부예외자의 경우나 장기체납자들의 경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4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나중에 미래에 있을 공적부조의 재원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좀 노력을 하는 게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일단 연금에 가입해서 최소한 10년은 부여야만 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연금 가입을 정부 지원을 같이 하면서, 하여튼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체적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한 절반은 정부가 대고 절반은 본인이 대고 이렇게 하면 예산 한 500억 정도로 차상위계층을 국민연금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계산이 있던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추계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한번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래서 저는 고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보다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현 정부 들어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었고 지금 A값, 즉 현재 평균소득의 5%로 출발해서 2028년에 10%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제도개선이 끝나야 이 로드맵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참 말씀드리기가 난처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인상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상에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

어 내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매년 0.29씩은 올라야 2028년에 A값의 10%씩 2배 정도 기초노령연금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자꾸 계획을 늦추면 중간중간 인상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피해가 대상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동안은 유감스럽게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식 의원** 장관님, 그건 저도 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면……

○**김성식 의원** 부처에서 대책을 내셔서 합의를 빨리 유도하세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건보 문제는 좀 제쳐 두고요, 보육 부문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김성식 의원** 보육, 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렸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김성식 의원**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로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김성식 의원** 70%까지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는 전액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양육수당의 형태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현 정부가 굉장히 노력한 분야인데,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100%로 늘리는 것보다 본 의원은 부모들의 실질 부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보육료 지원하는 게 시설의 표준 보육비용에 못 미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데 저도 동의

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추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학부모들한테 체감이 좀 덜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김성식 의원**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한 10만 원씩 사실상 더 내요. 왜냐하면 만 5세아 기준으로 보더라도 표준보육비용보다 훨씬 정부 지원 보육료가 낮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좀 인상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지금 복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보육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가 나오면 저도 굉장히 갑갑합니다. 보육교사가 다 또 여성들이고요, 보육교사들의 아이들 보육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연장형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늘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질 개선 이야기하기 전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는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과 관련된……

○**김성식 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국고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요, 대체교사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이런 쪽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 문제,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하려고 지금 장관님 뛰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저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양육수당도 시설에 보내는 경우랑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재부랑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4대강 사업도 거의 종료되어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추가 감세를 줄이고

또 종료되는 여러 사업을 감안하면 복지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의회의 협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김성식 의원님께서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열심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1인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작년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가 가지고 2009년에 비해서, 2009년까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작년에 3%p 가까이 올라서 54% 정도까지 가입률이 비정규직의 경우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700만 근로자 가운데 1000만 명 남짓 가입을 해 있는 상황이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임금근로자 쪽에 400만 또 실업부조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자 중에 한 400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장관님께서 이 정도 상황을 놓고 국가의 또 여러 가지 국정기획수석도 하신 입장에서 나라의 미래와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동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50% 정도를 최저임금부터 증감시스템을 쓰고 최저임금의 1.3배까지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약 6755억 정도를 가지고 약 한 120만 명 정도를 사회보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예산 중에 불용하는 것 줄이고 하면, 한 3000억 더 넣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실시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예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하는 방안을 그동안 내부 검토를 해 왔고, 좀더 전문적인 심층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만간 3월 초에, 그러니까 우리 KDI 등에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

해서 여덟 분한테 심층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영업자들의, 50인 미만 종사자를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에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게 빨리 좀 논란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작년 예결특위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안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층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현 정부가 근로 빈곤층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을 내년부터 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꼭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의원님처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EITC제도를 보완한다든지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여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성식 의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에게도 한 달 정도, 아빠에게도 한 달 정도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내놨고요, 선진국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휴가를 쓰게 되고 여성 차별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의 고용보험예산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획기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그것을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분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남성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육아를 위해서 가는 부분까지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김성식 의원** 제도는 동의하는데, 일반회계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우선 부담의 주체에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고용보험으로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가 배우자 각각 1년씩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육아휴직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김성식 의원** 남성의 경우 실제로 몇 %나 쓰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현재 작년에 819명……

○**김성식 의원** 800명, 1.4%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819명이 해서……

○**김성식 의원** 쓰고 있지도 못하는 휴가를 놓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전체 배우자에 대비해서 1.9%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성식 의원** 본 의원 홈페이지 내용을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잠깐만요, 그것이 2009년……

○**김성식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쓸 수 있는 한 달짜리 유급휴가만 주면 정말 열심히 아기를 키우겠다는 젊은이들의 많은 주문들이 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그것은 제가 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서 남성 육아휴직이 61%가 증가했습니다. 절대치는 아직까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작년 2월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육아휴직 대상 아동을 3세에서 6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여러 가지,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로 늘린다는지 이런 제도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제도 개선을 한 것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과 남성에게 육아 유급휴가를 30일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출산율이라든지 또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더 귀를 열고 들어보아야 되고 또 정밀 검토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뜻 동의를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당론으로 거의 채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찰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특히 사내하도급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체할 테니까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는 착실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체를 보고 정직하고 책임 있게 토론해야 합니다. 표만 얻으려고 혜택만 이야기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표를 잃을 각오하고 재원부담에 대해서 국민에게 말해야 됩니다.

고부담·고보장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저부담·저보장 모델,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는 적정부담·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 같이 책임 있게 대안을 놓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상시리즈보다 더 절실하고 우선적인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서 울고 계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는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출구조를 개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 무기준 완화 그리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130%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부는 올해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한 개 부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복지증진특별대책기구를 만들고 월례회의를 직접 챙길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만난 한 관악구민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는 열성의 반만이라도 복지에 쏟는다면 우리는 당장 힘들어도 믿고 견디겠다. 실업수당, 국민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림의 떡인 사람들도 챙겨 달라. 비정규직, 완전히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사장이 다르고 차별을 받는 것은, 그것이 너무 큰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도급 인생들, 더 이상 생겨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면 마이크를 더 드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의화**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전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행복한 집에는 특권이 없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등과 배려로 가득한 곳이 행복한 집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집이 없습니다. 사회계층 간에 불평등·양극화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해외도피 2년 만에 돌연 귀국해서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던 에리카 김이 돌연 귀국을 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두 사람 수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두 사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검찰의 사전 연락 없이 귀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에리카 김은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검찰에 사전 연락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현희 의원** 두 사람은 BBK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도곡동 땅의 실 소유자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 줄 핵심인물이라는 점을 장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직권 남용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에리카 김은 증거거래법 위반,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중점 수사대상입니다.

○**전현희 의원** 여러 가지 조사대상, 범죄혐의는 많지만 두 사람의 공통된 부분에는 그 두 부분의 핵심적인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는 것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언론 보도를 좀 봤습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안원구 전 국장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그리고 에리카 김, 이 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 소유자인지 그 진실을 밝혀 줄 사실상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검찰 조사의 수사대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두려움 없이 파고들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검찰에서는 전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이 사안은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사안의 실체 규명을 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검찰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장관께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하도록……

○**전현희 의원**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면……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사지휘권 발동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뭐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답하기는 그렇습시다마는 어떻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정권의 임기가 2년이 남은 이 시기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와서 수사를 받는 것은 지금 정권 차원에서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 이번에는야말로 그동안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부실수사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반드시 도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런 특검이나 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평가는 다 상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그 말씀의 취지는 우리나라 복지, 복지제도가 성숙한 서구의 나라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고령화율이라든지 복지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또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말씀에 굉장히 선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서 지금 복지국가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까.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대한민국 복지 수준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연 이래도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OECD에서 사실상의 꼴찌 수준입니다. 선진국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그리고 또 총리, 장관들의 복지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증현 기재부장관이 지난번에 “4대강에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 다 쓰면 돈 남는 것 없다. 사람들이 복지는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윤 장관이 그런 말씀했는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전현희 의원**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현희 의원** 그런 말씀을 만일 하셨다면 그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도 저는 한정된 재원을 운용을 해서 국가 재정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분야에 또 필요한 만큼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총리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또 윤증현 기재부장관의 말씀, 복지에 대한 인식, 제가 잘못됐다는 것 지적을 하는데 다 두둔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총리의 복지에 관한 인식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리께서 지하철 노인들 무임승차와 관련되어서 그때 한번 논란을 빚으셨는데요, 그 문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다시 거

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또 노인 부양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노인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 문제, 복지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해체되어 간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자식들의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은 인정을 하고 그것은 국가가 충분히 책임을 지고 부조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복지 문제를 떠나서 너무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 복지기관을 총리 취임한 뒤에 여러 군데 가 봐서 노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다 자식들이 있고 한 분들이 독거노인으로 계시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유리되어 있는…… 그러면 솔직히 “자식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가끔 전화라도 연락도 한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락도 없다”고 그리고 좀 섭섭해한 그런 이야기,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보고 ‘우리 사회가 이것은 아닌데’ 하는 걱정을 제가 이야기한 거지 결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가정이, 가족이 부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현희 의원**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따옴표를 따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사회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심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에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45%가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수치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 줘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 지난번 발언의 취지가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 논술시험 한번 보신 적 없으시지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김황식** 없습니다.

○**전현희 의원** 시험 문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 보시면 총리님의 복지정책 인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 대학교의 논술시험 문제인데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지금 국가에서 노인 부양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족들이 커다란 부담을 감수하고 부모 부양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술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노인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부양을 미풍양속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총리라는 자리에 계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자칫하면 가정에 떠넘기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지만 노인 부양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에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정책으로서 만들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 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복지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해체 문제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정책은 현실에 바탕이 되어야 되

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들이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또 부양하지 않는 그런 현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노인 복지정책은 수립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현희 의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들에 대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을 한다든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1차적인 책임이 가정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가능하신 노인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확대해 드리고 또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장기요양보험 내실화라든지 치매 예방 이런 쪽이라든지 각종의 노인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복지예산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열린 복지 상임위에서 제가 장관께 “상임위에서 우리가 증액시킨 복지예산, 주무장관으로서 경제부처의 논리에 지지 말고 반드시 꼭 지키고 돌아오시라.” 이렇게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전현희 의원** 장관께서 그때 상임위에서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전현희 의원** 그런데 지난 연말 날치기 와중에 복지위에서 확보했던 복지예산 약 1조 1000억 원 이상이 바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와중에 삭감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지요.

날치기로 당시에 날아갔던 상임위에서 확보했던 복지예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부장관으로서 ‘필요 없으니까 삭감되어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예산 항목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상임위에서는 통상 증액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증액이 많이 되는 상임위 중의 하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통상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증액이 예결위에 그리고 본회의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을 '삭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들니다, 죄송하지만.

○전현희 의원 상임위에서, 복지위에서 증액을 한 예산을 당시에 복지위원들과, 그리고 장관도 아까 인정을 했지만 “지키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장관께서 하신 발언은 경제부처 장관들이나 합직한 발언이지 복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서민들의 민생 복지를 조금이라도 낮게 해 주려는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의원님, 저희로서는 노력을 다했고요, 예결위원회에 또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가서 끝까지 디펜드를,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일단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는 그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취지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결위원회에서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의원 그렇다면 복지에서 삭감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될 때 장관 어디에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 자리에 와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날치기 삭감되는 그 자리에,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키고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그런 장관이 날치기하고 복지예산 삭감되는데 찬성하는 도장을, 표결을 했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날치기 삭감'이라는 용어에 일단 제가 동의하기가 힘들니다. 정부에서 넘어온 본예산 중에서 삭감된 게…… 빠진 게 있으면 '삭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을 삭감했다고 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일단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에서 애초에 편성해서 국회로 보낸 예산을 처리하는 과

정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또 제가 의원 신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론에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장관은 한나라당의 의원이기 이전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장관입니다. 그런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확보한 복지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삭감이 될 경우에는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실 그런 분께서 오히려 몸싸움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기어이 들어가서 이런 예산 삭감안에 찬성표를 눌렀다는 것은 복지부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여전히 제가요 '날치기 삭감'이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글썽요, 보시기에…… 국민들께서 그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좀 보기에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으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여전히 '날치기 삭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중요하고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의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글썽, 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계속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애초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것에서 삭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지기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이하 총리, 장관들의 복지인식,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지국가가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 또 노인복지를 폄하하고 있는 총리,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토목사업이 복지보다 우선한다는 기재부장관, 서민복지 예산을 날치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장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 결정권자들의 복지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께서 복지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무상복지, 보편적복지 시리즈는 바로 이런 정부의 복지철학의 부재에 대한 안이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보편적인 복지정책, 지금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폄하가 매우 심한데요,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복지 투자를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과 재정 여건이 다르고 또 사회적 여건이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재정 여건, 또 복지 수요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OECD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 온 복지정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더라도 복지는 확대해 나가되 다른 나라의 예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정되는 상황 등도 참고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틀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을 구성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노력을 해야 된다, 복지의 사각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OECD의 꼴지 수준인 대한민국의 복지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라는 그 내용입니다.

복지 투자의 증액에 동의를 하신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을 이제라도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의사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민주당에서 내놓는 확정적인 복지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정이 어떻게 얼마큼 소요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국민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해서 하여튼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건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합의하고 납득하는 그러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시에 이것을 증액한다든지 확대시킨다든지 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의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복지정책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정부가 수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민주당 정책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명 정도를 대량 해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리해고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리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현희 의원** 실제로 한진중공업의 그동안의 영업수익성을 보면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영 악화는 명목

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국내 그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주가 없어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조선소를 낸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현희 의원** 그 조선소에서는 근로자 임금이 국내의 10% 수준인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현희 의원**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소를 내면서 노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어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외투자로 인한 그런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리·감독, 조사 철저히 할 의사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의 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정리해고하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우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양쪽에 불복이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원칙적인 답변입니다마는, 그러나 노사 간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합의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급격한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변화된 사정하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또 관련된 이어지

는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 만큼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저도 사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대통령이 ‘오늘부터 복지국가다’라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복지국가라고 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끼실 때 비로소 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남은 동안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전현희 의원님,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연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의 노고가 많으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안을 국회의원 김호연입니다.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국정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 건립 부지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착공을 하고 내년

에는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추모의 전당은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검토가 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됐습니다.

○김호연 의원 대통령께서도 2009년 4월 10일 “이 사업의 건립은 좋은 일이니 서울 시내보다는 독립기념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족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여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국민과 유족들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내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초 독립기념관도 적지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역사성·연계성·접근성·확장성, 다방면에 걸친 검토 결과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연 의원 LH 공사 부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김호연 의원 사업이 곧 시행된다는 정부 말만 믿고 대출과 전·월세 비용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받는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댈 수는 없지만 주택사업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가 최우선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호연 의원 주민들이 강력하게 사업 취소를 원하거나 재조정을 원하면 정부와 LH공사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자체 및 주민의견, 그리고 주택수급 전망, 현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연 의원 그런데 지금 LH공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주무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실태 파악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LH공사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LH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LH공사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참 지혜가 필요한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연 의원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탄약창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연 의원 탄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전 거리를 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인근의 학교, 공장, 건물, 도로가 들어서면서 반경 1km 이내 보호구역 지정이 이미 들쭉날쭉해져서 형평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하지만 그러나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이 되고, 또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수성은 감안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형평성이 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것들이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호연 의원 이제 보호구역 지정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

양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택시 운송과 관련된 문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연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행규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직권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중재의 요건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동안의 협의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직권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협의에 맡겨 두면 주민들의 갈등만 커질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 예로 천안·아산 KTX 역사만 해도 약 8년간 그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호연 의원** 현실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장관에 의한 직권중재 방법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해당사자인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취지하고 달리 오히려 갈등·대립이 심화되거나 또 신속한 해결에 장애가 된다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안도 한번 최후적으로는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연 의원** 국제과학벨트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대통령님의 공약이고 한나라당의 제18대 총선 공약입니다. 정부 평가에서도 충청권이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당연히 충청권으로 와야 합니다.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 또는 정부가 '과학벨트는 충청권으로 간다' 하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과학벨트의 입지를 정하는, 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벨트 관련 특별법이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는 충청권의 어느 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입법이고, 그리고 입지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입지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효성 있는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과 같은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바로 그것이 위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연 의원** 그 이외에도 더 중요한,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말 그대로 벨트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즉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지역을 정하는 것이 어느 특정 도를 지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권을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지자체를 선정하면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특정 지역보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거점지구 또 기능지구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학벨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연 의원**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1일 언론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충청도와 도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본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다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혹시 어떤 특정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하

튼 법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또 지역 간의 분쟁을 잠재우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과학벨트사업과 세종시 원안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아까 어떤 경위로든…… 경위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지금 현행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또……

○**김호연 의원** 과학벨트사업은 원래 세종시와는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던 기초과학 부흥을 위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시 수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었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어, 정확히 말하면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자족 기능이 충분하다는 국회와 국민의 판단으로 세종시 수정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국회는 당시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입지를 선정했으면 오늘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어떤 경위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현행법이 있는 이상은 그 현행법에 따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학벨트 입지평가에서 천안이 1위를 했다는 보도,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입지평가 결과 천안 1위를 공식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운찬 총리가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시 교과부 장관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또 설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이 1위로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이 그때에 검토했던 결과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체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다음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총 41억 원의 연구비 중 35억이 입지선정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과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은 입지선정 후보지와 관련된 연구였고 국토부 연구는 도출된 후보지에 대한 공간 및 도시 배치를 수행한 연구입니다. 즉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이미 후보지가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리, 이 연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보아 주십시오.

2010년 8월 인쇄된 이 최종보고서 81쪽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후보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전 과학벨트 또 세종시 수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해 가지고 일정한 검토나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는 압니다마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에 따른 절차로 이렇게 하고, 그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또 그와 비슷한 검토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 현행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 진행에 흠이 없으려면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모든 것이 검토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이 결과는 절대 사전검토 과정에서의 평가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의 최종 인쇄본을 만들기 바로 직전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명의 입지선정 연구위원과 자문단이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과학벨트특별법의 입지선정 기준, 즉 연구기반 31%, 산업기반 27%, 정주기반 22%, 접근성 20%를 주요 지표로 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한 총 16개 지표를 개발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습니다. 1차로 18개 후보지역이 선정되었고 연구위원과 자문단들이 1·2차에 걸친 평가 작업과 보완 끝에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운찬 전 총리께서 답변하신 '천안 1위'라는 것입니다.

총리께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한 사전평가가 아닌, 즉 정량평가가 아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다 반영한 최종평가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경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지 선정 평가가 최종보고서 인쇄 과정에서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아 주십시오.

교과부의 종합계획 연구는 광역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충청 1위' 부문이 빠졌고 기본계획 연구는 '천안 1위' 등 각 항목별 평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순위가 빠졌고 국토부의 공간조성 연구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이 연장되었다가 보고서도 없이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 모든 내용들은 정부에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입지 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6월 17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매월 연구 현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총리, 이 결과는 정부에 분명 보고되었고 따라서 정부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망실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며 국가의 소중한 연구를 소홀하게 관리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호연 의원** 지금 담당 연구원의 컴퓨터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 의원실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향후 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은 바로 현재 특별법 제9조의 입지 선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총리, 자료를 봐 주십시오.

당시 정부가 입지 선정 평가를 했던 지표는 현재 통과된 과학벨트 특별법 제9조에 나와 있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총리, 평가 기준이 똑같다면 법률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똑같은 요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가 그때에 한거나 또 새롭게 한거나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일치되지 않는다면 과거 것이 잘못되었든 또는 지금 것이, 새로운 것이 잘못되었든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가 될 텐데, 과거에 그와 같은 평가가 있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른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과거의 것이 과연 합당한 그런 거였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그 의문들이 어떤 의미로든지 해소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김호연 의원** 과학벨트거점지구는 올 상반기에는 입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현재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아직 법률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김호연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현재 진행되는 연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선정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는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결말을 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큰 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결론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역시 법에 정한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 등을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연 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수십억을 들여 길게는 1년 반 동안, 짧게는 10개월 이상, 현재 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했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새롭게 구성되는 벨트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리라 생각합니다.

○**김호연 의원** 총리, 지금 과학벨트에 관련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말씀처럼 이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학벨트는 과학자, 기업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을 하시고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구하고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이 바로 언론보도와 정운찬 전 총리가 확인해 준 천안 1위의 십자벨트입니다.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락된 연구평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평가된 결과들을 총리가 꼭 챙겨서 앞으로 있을 입지선정위원회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충분히 할 것이다, 합

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진행되는 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하겠고, 명확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식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의혹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하는 약속은 드립니다.

○**김호연 의원** 구제역과 침출수 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의 불안으로 물가가 치솟고 동남아시아·아시아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창궐해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혼란으로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얼핏 보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위기는 바로 우리 내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제역 경고를 무시했던 정부, 정치논리로 국책사업을 펴려고 하는 관성, 정쟁 때문에 국제정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무능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촉구합니다. 이제 정쟁과 대립을 그만두고 민생의 현장으로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호연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벌써 6시 반이 다 돼 가네요. 힘드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괜찮습니다.

○**박선영 의원** 3·1절에는 좀 쉬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제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리비아 사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어제 독도에서 김장훈 씨가 콘서트 하는 것도 못 보시고 준비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선영 의원 김장훈 씨가 독도에서 콘서트를 처음으로 했는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울었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인데 일본 측에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일본에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빠르면 이 달 말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 정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외교적인 항의 조치를 취하고,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 등이나 의식 있는 인사들과 합동해서 그러한 검토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적어도 조용한 외교는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안 하실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렇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하면 이게 일본의 꾀에 말리는 것 아니냐, 분쟁 있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가능한 한 일본의 유인에 말리지 않도록, 적어도 그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분쟁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은 양면전략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번까지하고는 다른 정책을 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조치,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적절한 대응, 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한 대응, 또 조용한 대응이 필요할 때는 조용한 대응으로 그야말로 실속 있는 그런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모조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위중한 상황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정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실리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가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문제에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총리실에 독도관리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 대책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박선영 의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독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독도를 확실하게 우리 영토, 우리 국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지지부진합니다. 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독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못 가 봤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 자체가 무관심 아니신가요? 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한승수 총리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가 보실 예정인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필요하고 또 사정이 허

락하는 한은 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영토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독도는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박선영 의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려면 독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지도인데요, 지금 접안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접안시설 일단 좀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독도에는 엄청난 어종 자원이 있습니다. 이 어종 자원을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잠수정을 띄워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해저관광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밖에 없는데 자기부양 활주로를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부양 활주로를 만들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섬과 서섬이 사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현수교를 놓아서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면서 조류 감상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반에서는 지금 거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고려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독도에 다양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과연 어디까지 합리적이고 가능한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예.

다음에 앞서서도 계속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지금 뭐가 제일 관건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률 9조에 규정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가장 적지를 정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학적인 기술적인 검증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심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배경—히스토리—때문에, 또 과연 그게 믿을 만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지금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행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그야말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온 나라가 좀 시끄러울 것이고 국민들이 승복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총리 내지는 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접근을 할 것입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결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새겨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특히 충청지역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으로서는 충청지역이 제일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겠고, 또 충청지역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과거의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주장을 하니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 전임 총리는 세종시 총리로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총리

님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담 총리였다는 오명을 받지 않으시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역적이거나 또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 과학벨트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과학벨트를 좀 보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공부하시면서 다름슈타트(Darmstadt)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못 가봤습니다.

○박선영 의원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인구 1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유럽에 중이온가속기가 있는 곳이 지금 독일의 다름슈타트하고 스위스 제네바하고 프랑스의 칸(cen)입니다. 그런데 칸이나 제네바는 지금 벨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다름슈타트 여기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벨트가. 그래서 여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곳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다름슈타트의 과학벨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 프랑크푸르트에서 40분 거리에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다름슈타트기술대학교하고 유럽우주업무센터가 있고요. 유럽기상위성개발기구가 있습니다. 다 자동차로 20분에서 30분, 짧은 데는 15분 거리에 몰려 있습니다.

이 곳에서 모든 독일의 항공, 우주, 핵물리학 그리고 각종 IT·BT 산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벨물리학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입지를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입지를 한국에 대비시키면 그대로 나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한 시간이 채 안 걸리지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의 광역시하고 오창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름슈타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과학단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뉴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라는 곳입니다. 그 주도는 롤리입니다. 롤리를 중심으로 해서 채

플힐과 더불어, 각 세 도시에 대학들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과 그냥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있고 채플힐대학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를 이루면서 모든, 핵물리학과 원자력과 IT·BT 산업의 산학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벨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트라이앵글파크가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IT만 하다가 지금 내려앉은 상태고 여기에서는 지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초과학을 연구해 온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짐작은 합니다마는.

○박선영 의원 짐작가시는 곳은요?

○국무총리 김황식 KIST·KAIST 쪽 아닌가 싶습니다.

○박선영 의원 예, KIST하고 대덕연구단지 모인 곳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다음에 가장 우수한 연구 인력이 모여 있는 곳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질문하신 취지로 봐서 그쪽인 것 같습니다.

○박선영 의원 대표적인 과학연구단지는요?

○국무총리 김황식 대덕연구단지……

○박선영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내 연구소가 충청권에 연구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기업체 연구소가 33%, 공공연구기관이 29%, 대학연구소가 30%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만 명당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을 보면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충청권에 많습니다. 1만 명당 99명이요, 수도권은 85명, 호남권은 32명—가장 적습니다—동남권도 충청지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현재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식견만 듣더라도, 그리고 국제적인 입지 조건과 입지 현황을 보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21세기 과학한국의 초석을 놓을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 지내셨으니까 몇 가지 또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실 경영을 하고 또 게다가 비용과 손실을 과장해서 적자를 내는 것처럼, 실제로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회계를 변경하고 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큰 금액을 책정해서 투자비용을 과장하는 공기업이 있다면 감사원에서는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책임 물을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변상하도록 하고, 각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시지요? 감사원장 계실 때 그렇게 하셨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고, 그런데도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기본급도 올리고 성과급을 나누어주고,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시정조치, 시정을 하도록…… 적절한 구조,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박선영 의원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계실 때도 KBS에 대해서 그런 시정조치 내리셨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내리셨었지요? 그때 시정조치 내린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때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직전에 전부 종료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뒤에 챙겨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박선영 의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내린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았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원은?

○국무총리 김황식 또 그에 따른, 계속해서 시정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각종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박선영 의원 그런데 그런 후속조치 전혀 안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그야말로 많은 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대개 중요한 기관에 따라서 감사 주기가 있습니다. 감사 주기가 있는데 KBS 감사는 2008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KBS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마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이 감사에 해당되는 햇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 있을 때 KBS는 금년에 감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하는 것은 더 감사를 해서, 물론 그간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챙겨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감사를 해야 그 이행 여부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2004년도에도 똑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만 하고 뒤에 어떤 점검도 하지 않으니까 KBS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나름대로 후속 조치로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시정을 하면 대개 피감기관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8년도에 감사원이 KBS를 감사한 결과, 인적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2급 이상 상위직이 전체 직원의 50%가 넘습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부임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와 같은, 인적으로 좀 기형적인 구조가 있다 하는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선영 의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지난해에는 인건비가 전체의—직접 인건비가—38%입니다. 간접 인건비까지 합하면 45%입니다.

그렇게 되면 SBS의 3배가 훌쩍 넘고요 MBC의

1.5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구조조정 하나도 할 생각 하지 않으면서 수신료만 올려 달라, 서민들 주머니만 털겠다라고 하면 총리께서는 납득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액수, 숫자라든지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시청료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의 노력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의원** 그런 경영개선이나 자구책 없이 수신료 1000원을 올리는 것에 동의해 준 방통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KBS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라서 얼마큼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되는지 하는, 뭐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해결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수신료를 인상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사 그런 구조조정이 미흡했다고 해 가지고 미흡했으니까 일체 수신료는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바로 도출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고요, 과연 어떤 근거로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선영 의원** 무슨 이유로 수신료를 올려 달라고 했는지 모르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는 총리하고는 전혀, 총리실이 관여할 수 없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조직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챙겨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앓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이게 수수료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계에서 정확히 사실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께서 보실 때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잘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KBS가 항상 정권 교체기에 논란이 되는 경영진 교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공영성,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 앞에는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수수료 인상 문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인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또 어쨌든 액수에 따라서는 국민에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자료나 식견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선영 의원** 독일에 계셨기 때문에 독일의 공영방송 체제가 어떤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같이 한번 저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파란 막대기가 수신료고요 빨간 것이 광고입니다.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 광고를 저렇게 많이 하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특히 국영방송,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광고 그리고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지금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안 올린 것은 맞지만 30년 동안 처음에는 600만 대밖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수신료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00만 가구가 TV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전에서 강제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99%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가구가 많아지면서 수신료 수입은 지난 5년 사이에 45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단지 30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독일에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까 마는 ARD하고 ZDF가 같은 회사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다른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세계 어느 나라가 공영방송 채널을 공중파에, 지상파에 두 채널이나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없습니다. KBS만 그래요. KBS 1·2가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KBS2가 원래 KBS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래 동양방송……

○박선영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 과정이 매우 불법적이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 불법성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KBS라는 기구를 좀더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채널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고품격의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 그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교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이 되는 것이 KBS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또 중앙 공영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방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가치 또 국민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 그런다면 단순히 비용, 수입·지출 관계뿐만 아니라 KBS가 장래를 위한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얼마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고 하는 그런 관계를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소 국민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더 질 좋은 품격 있는 방송이 되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소박하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제 개인적인 소박한 한 시민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박선영 의원 아니요, 총리님, 채널을 2개씩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하나라도 제대로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디지털화가 되면 부가 채널이 4개에서 5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KBS2는 민영화시키든지 아니면 EBS로 전환해서 공교육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KBS를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의 방송환경 변화에도 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말 우리 국민의 방송, 기간방송,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그게 옳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의원 좋습니다.

KBS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신료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식견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도 잘 모르시겠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기 때문에 KBS 이사회 또 방통위 또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좋습니다.

대법관 출신이니까 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사법연수원 입소식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연수생들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박선영 의원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 검사 임용 관련된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서 항의의 취지로 그런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지요, 그 참석한 연수생들도 대부분 '로스쿨 검사 임용 반대'라는 큰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앞에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석간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로스쿨 졸업생들을 입도선매하는 것이 위법 아닌가요? 검찰청법 29조에 보면 사법연수를 마친 연수생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입도선매하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내용을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셔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임관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로스쿨을 적법하게 수료하고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 그래서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뒤에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침으로서는 여하튼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로스쿨의 추천을 받고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임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입도선매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로스쿨이 법무부 전용 학원입니까, 아니면 사법연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걸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까.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불법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서 남기춘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화그룹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은 수사지휘에 속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만약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한테도 확인하고 또 법무부 간부들을 제가 불러서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선영 의원 남기춘 지검장한테도 사실관계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로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나올까 봐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그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남 검사장 이야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법무부에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영 의원 살아 있는 대통령 수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재벌은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는 우리를 지치게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실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로서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런 틀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간부가 확인했던 사항도 그걸 수사에 개입하고 어떤 지휘하는 상황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선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파악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확인한 것이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로서는 검찰사무규칙에 따라서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알지 그것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을 하거나 영장을 청구하라, 재청구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됐고 저는 그것이 모든 정황에 비추어서 옳은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선영 의원 팔이 안으로 굽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법무부 간부 통해서 울산지검에 직접 전화해서 기소를 하루만 늦춰 달라고 했는데 그것 명백한 수사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검찰청법 8조에는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고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개별검사들에게 모조리 전화를 한 번씩 한다면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일반적인 검찰에 관해서는 또 법무부장관이 나름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사무규칙에도 일선에서 보고를 할 때는 검찰총장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에게도 그 상황 자체는 보고할 수 있다고……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지요, 검찰청법 8조가. 개별검사에게 하면 그것이 바로 권력이 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총장을 매개체로 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보고 자체는 검찰총장·법무부장관 같이 또는 어느 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선영 의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총리님.

검찰청법 8조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분명히 ‘만을’ ‘only’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지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야만……

○박선영 의원 그렇게요, 그런데 지금 한화사건 그다음에 선거사건 이것을 직접……

○국무총리 김황식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고요. 검찰사무규칙에 일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지, 개별적인·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대법관 지내신 분의 답변으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소를 하루 늦춰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지휘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

기를 해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박 의원님께 설명을 해서 문제를 또는 오해를 풀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제가 납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차별이라든지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한화 사건이나 또 울산의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한 사항은 제가 관심을 갖고 필요 이상으로 한번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영 의원 지금 에리카김 씨하고 한상률 씨가 자진 입국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지금 온갖 루머와 음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서로…… 과거에 의혹을 살 만한 문제로서 큰 사건들이 연루돼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오전에 법무부장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건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의혹을 받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수사를 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영 의원** 두 사건의 경우 지금 현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률 씨 사건의 경우에는 박연차 게이트하고 연루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전 정권하고 현 정권까지 모두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도중에 자살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검찰이 늘 해 오던 대로 중간수사 발표라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하나씩 벗겨 가고 그리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첩경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검찰로서는 국민들이 그 두 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나름대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에 또 법무부장관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만약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는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책무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장관한테 맡겨 놓지 마십시오. 지금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부가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검찰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리께서 명확하게 중심을 좀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법치주의도 확립할 수 있고, 그래야 공정사회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 창녕 출신의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밀양시창녕군의 조해진 의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총리님께서 아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애쓰셨는데,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하고 난 이후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출하 대기 중인 소가 10만 두를 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은 이동제한이 풀린 후에 이 가축들이 홍수 출하가 됐을 경우에 축산물 가격 하락이 올까 봐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악취대란이라든가 또 핏물식수라든가 환경재앙 같은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 많이 나오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해진 의원** 그리고 거꾸로 묻힌 돼지라든지 또 뒤엎킨 사체 또 매몰 사체가 튀어나온 모습과 같은 그런 혐오스럽고 충격적인 영상들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일단 고기는 먹지 않겠다, 당분간은 자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비기피 심리가 급속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그 자체도 자체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알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구제역 자체도 문제지만 그 매몰지 처리 문제 또 이동제한이 풀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예상치 않았던 또 다른 구제역 여과가 있는데요. 육류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그 결과로 육류 부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상추 같은 것이 산지에서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농가들은 원가를 밑도는 적자영농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농업용 면세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올 겨울 굉장히 추워 가지고 시설영농들의 육류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올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해진 의원 그런데 정부는 또 농업용 면세유를 계속 줄여 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더불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이런 일 때문에 도산하는 원예 농가들이 속출할 것을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를 지역구에 내려갈 때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FTA 해외시장 개방 그리고 유가 급등, 구제역 등으로 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예농산물 가격 하락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농가들을 잘 챙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농림부장관님 안 계셔서 세부적인 걸 자꾸 총리님께 여쭙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처로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이, 보고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망라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부처와 협의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지역의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은 정부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그리고 생산 시세 안정을 위해서 생산면적쿼터제 도입을 좀 검토해 달라,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를 당분간은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대책을 협의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총리님 잠깐 쉬시고, 환경부장관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보도를 통해서 구제역 살처분과 집단 매몰 이후의 사후적 현상으로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려 사항 가운데 가장 걱정하고 예민하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식수 오염 문제인데, 아까 일부 답변도 있

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리 국민이 먹는 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수도시설 혜택을 보든가 아니면 안전한 지하수를 음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나와서 먹는 물에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마련된 매몰지침에 의해서 매몰을 할 경우 그리고 농립수산물식품부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환경부가 지도하고 있는 바대로 지방에서 매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매몰이 이루어지고 특히 흑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소보다도 돼지가 더 많은 수가 매몰이 되면서 돼지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매몰 과정에 깔아놓은 이중비닐 등이 파손이 되어서 그리로 침출수나 또는 용출수 등이 유출이 될 경우에 이것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몰지에서 300m 이내의 지하수원을 음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군데를 택해 가지고 그 지하수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몰지와 지하수 오염 관계를 규명하고, 만일 어떠한 조짐이 보일 때 상수원 보급 그리고 다른 지하수원의 확보 등 대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하천에서 가까운 곳, 우리 매뉴얼에는 30m 이상을 떼도록 되어 있는 데 그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천 가까이에 매몰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매몰이 이루어졌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약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 1000군데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끝으로 물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300군데에 관측정을 설치해 가지고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에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에서는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이 수질검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세균검사를 해서 수질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대로만 되면 사실은 매몰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원 내지는 먹는 물 지하수원을 오염시킬 우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매몰지를 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혹여 중간에 잘못돼서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해진 의원** 다른 관계 부처들과 협조는 잘 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님이 본부장으로 계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정부의 모든 부처와 또 전문가, 유관기관이 통합되어서 구제역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구제역이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되기 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본부장이 되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매몰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농림부장관 책임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즉 구제역 확산이 되면서 저희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가 하느냐 환경부가 하느냐를 굳이 따지지 말고 국민들 기준으로 해서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차원의 매몰지 사후관리 같은 데는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해진 의원** 매몰 초기부터 환경부가 같이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초기부터 환경부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모니터링 하고 있었나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조류독감과 관련된 매몰지 관리를 해 왔고 또 작년 강화도 등 구제역이 일부 지역에 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해 온 경험이 있고 또 매몰지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제기한 용역보고서 자체도 환경부가 만들었지만 농림부에서 받아들이고 반영을 해 줘야 일선에서 혼란 없이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긴밀하게 해 왔습니다.

○**조해진 의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예.

총리님,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목적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해진 의원**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생산유발효과가 40조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35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경남권만 국한해 보더라도 생산유발효과가 9조 원이고 일자리 창출 8만 3000명이 될 건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서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동도급 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 조치는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중에서 보 건설과 준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 준설·건설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각종 생태공원이 라든지 정비사업 이런 때에는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보하고 준설공사 1차 사업인데요, 거기는 거의 참여가 안 됐는데 정부가 '시공사들이 그런 대규모 전문 토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역량을 가진 지역 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2차 연계사업 때는 조정사업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조그마한 업체들까지도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세세한 말씀은 다 시간 부족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사업 위주의 2차 연계사업 공사계약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1차 때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통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공동도급 시 일정 비율을 턴키공사의 경우는 20%, 일반공사에는 40% 지역 업체를 의무

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를 했고 그 결과 턴키 공사에는 29.3%, 일반공사는 54.7%로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규정된 것보다도 1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처의 연계사업 발주 시에 진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니까 그때 지역 업체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문제가 거의…… 혹시 있는 게 아니지요, 심각한데……

○**국무총리 김황식** 아, 그렇습니까?

○**조해진 의원** 2차 연계사업 공사계약 자체가 지난 설 전후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건, 첫째는 혹시라도 남은 미계약 사업이 있으면 그거라도 좀 챙겨 달라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부지만 너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국토부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한번 정확히 챙겨 봐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이런 취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우리 국토부장관님께서는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지역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차 연계사업까지 공사의 수주 통계가 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경남도를 기준으로 하면 28.5%고 4대강이 낙동강이 지나가는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는 13%인데 이것도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지역구인 밀양하고 창녕 그리고 건너편에 창원·의령·함안의 업체들이 참여한 비율이 6.8%입니다, 계약 만료된 현시점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낙동강 20공구의 두 공사업체를 비교하면 한 서울 소재의 모 회사 수주금액이 450억인데 창녕군 소재의 모 회사 수주금액이 8300만 원입니다. 예만 들어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제가 지역구에 가면서 이 사업을, 현장에 한 20여 차례 가면서 사업 성공하도록 모니터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

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 그동안에 공사 현장의 기계소리나 소음이나 매연이나 또 먼지나 모래바람, 지난번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사고위험 그리고 침수 불안 같은 그런 수많은 불편이나 피해도 견디면서 나중에 2차 연계사업 때는 지역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돈이 돌 거다, 정말 지금 어려운데 곧 좋아진다는 그것만 기다려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 전후해서 2차 연계사업도 공사계약 마무리된 시점에 이미 그 약속 이행이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시공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확답을 받았다가 식언하고, 확답을 받았다가 식언하고 한 그걸 겪으면서 저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한 국가정책인데 말로써 약속했다가 뒤집고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이런, 그래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을 초래한 공직자들이나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신공항 포함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책사업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등생 정부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사업 선정이 된 지역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안 된 지역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만족하게 만드는 정부가 우등생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점의 정부는 선정된 지역은 고맙지만 다른 지역은 섭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의 일처리를 하면 평균점 정부이고, 평균 이하는 시간 끌고 때 놓치고 또 힘 다 빠진 상태에서 해 가지고 받은 데는 받은 데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못 선정된 탈락 지역은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저는 평점 이하의, 낙제점 정부의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공항이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나 LH공사 이전 문제, 이 문제에 있어 가

지고 우리 행정부가 거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런 문제들이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답답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세 번째 유형에 가깝습니다. 특히 신공항이 그런데요.

정부는, 행정부는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안도 제시해 가지고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제때에 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책무인데 지금까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시기를 놓치고 미루면서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이 커지도록 해서 결정하기 아주 곤란하도록 만들어 드린 것은 정부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상반기 중에 발표하시겠다고 했고 정부도 3월 중에 입지 선정을 마치기로 했으니까 뭐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부는 선거라든지 민심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수습하고 해결할 테니까 더 이상 그런 데 눈치 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히 신공항 문제는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원칙과 기준에만 입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그리고 신공항을 반대하는 주장 중에서 좀 황당한 주장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로 2시간 걸리는데 무슨 공항이 필요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만 해도 300km로 달려서 3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갈아타고 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면 한 5시간가량 걸립니다. 부산역에서 새벽 첫 기차, 4시 45분 기차를 타도 인천공항 오전 국제선 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 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찍 올라와서 하루를 서울에서 지새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남권 240만, 한 해에 이용객들

이 6000억 원씩을 여기에 지출을 해 왔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뭐 연기론이니 무용론이니 펴는 이런 허황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엉터리 주장에 휘둘린다면 정부도 엉터리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나 국민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타당성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건 또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해진 의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공항이 필요하지 않은데 웬 공항이냐고 그러는데 공항이 1년, 2년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뒤, 15년 뒤 내다보고 필요하면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지금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10년 뒤에 이 지역에 화물이나 승객, 항공 물류의 수요가 2배로 늘어나고 15년 뒤에는 2.6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15년 뒤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10년 뒤, 15년 뒤 대한민국이 3만 불, 4만 불 선진국으로 갈 때에도 이 지역, 영남 지역의 경제 상태는 지금 현재 수준에 그대로 있거나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도 입지 평가과정에서 다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의원** 동남권 1300만 주민들 가운데서 1000만 이상이 밀양 신공항을 요구하고 있고 또 호남 주민들까지 밀양 신공항이 돼야 된다고 지지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후보지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부권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또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더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해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의 6당 대표들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새 정부 초기에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개헌을 미루어 왔습니다.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 가서도 또 정치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안보가 어떻게 또 준비가 미흡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상투적인 주장을 녹음기처럼 틀게 될 것입니다.

후진 정치의 뿌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정치 개혁의 핵심은 비대한 대통령 권력과 행정부 우위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서 의회와 지방정부와 주민자치와 시민사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을 폐지하고 예산권을 국회에 전속시키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하 양원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야는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앞으로도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략과 정쟁의 전술적 도구로만 이용될 뿐이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조해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

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성동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한국을 국권침탈 100년, 6·25 한국전쟁 60주년 만에 국치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에 모두 성공한 희소한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무역 규모 세계 7위 또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 성과에 마냥 들떠 있을 수 없습니다. 풀어가야 할 여러 숙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과제들이 앞선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그리고 오늘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의를 통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심각한 신뢰와 통합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정치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조정해서 큰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 반목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증폭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와 국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갈등조정·타협도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심각히 자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몇 가지 현안들은 안타깝게도 정부에 대한 주권자요 납세자인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동 의원** 의회정치의 핵심은 토론이고 또 토론의 다이내믹한 현장이 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질문자로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

다.

이번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딱한 심정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특사 숙소 침입 사건이다’ 이렇게 꼬박꼬박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국정원, 호텔 침입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기사를 붙이고, 사설을 내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같이 국민들은 다 아는데, 세계가 다 아는데 정부만 쉬쉬하는 듯한 이 태도를 보이는 게 어색하지 않은가? 왜냐? 이런 것이 불신을 가중시키고 불통을 촉발시키지는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콘셉트—개념—부정, 네이밍,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김성동 의원 답변하시기가 조심스러우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첫날부터 기본적인 입장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을 오히려 좀 덜어 드리는 것이 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동 의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대공, 대정부 전복 또 방첩, 대테러나 국제범죄조직 관련 사건의 수사·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무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국회나 정부나 또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동 의원 그런데 저는 정작 국정원이 나서서 이런 보호막을 깨뜨리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국정원이 요사이야말로 바짝 주의해야 될 시기 아니었느냐, 리비아에서 정보 수집하던 국정원 직원이 추방되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된 바도 있고요, 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피폭 때도 핵심 업무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 또 판단 능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당겨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무기강도 마찬가지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보도에 따르면 소위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호텔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호텔 안전요원한테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은 참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강이 어떡하다 이 지경이 됐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나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에 구제역과 맞서 싸우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국가안보의 축이라고 하는 군, 경찰 또 국정원, 이런 행태는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거든요.

지금 정부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분석했을 때 금년 봄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안보의 중요 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시간관계상 약하겠습니다, 나사가 풀렸다고 느끼진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동 의원 저는 또 하나요, 공직자들의 책임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책임 문제가 나오면 ‘진상이 안 밝혀져서, 임명권자의 말씀이 없어서 책임을 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솔직히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릴 때도 있거든요.

흔쾌히 국민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불신을 키우고 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많 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이해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해합니다.

○김성동 의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이전 총리들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해 달라’ 주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동 의원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바가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동 의원 정치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소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총리의 소통 역할, 매신저 역할이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생생한 여론을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또 해당 관계자들을 충고하고 질책하고 지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내세워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통합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여론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황적으로 그리고 대통령께도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동 의원 저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의 핵심은 선택과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즉 실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혼란과 억측이 생기고 민심과의 괴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책이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은 요원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적시 적절한 역할을 거듭 또 당부드리고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지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동 의원 교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대학 입학 수능시험 날짜에 맞추어서 출근시간—공직자나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출근시간—늦추고 또 듣기평가에는 이렇게 비행기 이착륙 자제시키고 기관차가 경적도 울리지 말고 이래라 이런 협조 구하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수능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한 번으로 아이들 소위 인생이 좌우된다 할 정도로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는 수능 부담을 일관되게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동 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한 학력 사회인 우리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수험생들,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이나 대입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그런데 대단히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책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데 상습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입시 정책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2월 17일 날 수능 보완책을 발표를 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이런 보완책 내놓게 된 배경이 뭐니까? 다시 말하면 2010년 수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난번 수능에서 EBS와 70% 연계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70% 연계는 일관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런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모아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요.

첫째는 EBS랑 너무 연계에 치중하면서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 약했다 하는 점 있어서 이제 공교육 보완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연계의 체감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연계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좀 체감률이 높은 쪽으로 유형을 단순화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었고, 또 난이도가 들쭉날쭉했다는

점에서 난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김성동 의원**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장관님, 그런데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물론 저희들이 그런 보완점을 미리 충분히 예견하고 사전적으로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출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이 걸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동 의원** 2010년 3월에 당시 안병만 장관이 EBS하고 MOU를 체결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그리고 그 체결한 후에 'EBS 수능 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금년부터는 70% 이상 반영하겠다'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강의 연계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따라서 70% 반영은 숫자놀음이다……

제가 PPT 자료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잠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EBS가 70% 연계율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연계율에 꿰맞춘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직접 연계율 간접 연계율하고.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숫자놀음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앞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시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정책이 발표된 이상 또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리는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되고요.

보다 더 큰 배경은 수능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일관된 입시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방향에 따라서 일관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예, 이게 바로 수험생들이 많이 요새 말하고 있는 '이전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 '연계율 70%라고 했는데 높은 연계율 체감하지

못했다', '허탈감·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배경의 원인, 이런 반응의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시지요?

이 EBS 관계는 제가 소관 상임위가 문방위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교재 출판 시장이 초토화됐어요, EBS 연계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의 독점 구조하에서 'EBS 책장사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거든요. 사실 EBS 재원의 40% 가까이가 교재 판매로 얻는 수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야 될 교재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결국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EBS 교재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가짓수도 너무 많고 부담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대책에서 EBS 교재 숫자도 대폭, 절반가량 줄였고요 또 EBS 교재 가격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예, 중요한 건 이제 보완책 문제인데, 보완책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연계율하고…… 연계율에 너무 집착하니까 변별력이 약화되고 수리영역 같은 과목도 암기과목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널뛰기 수능' 이런 문제도, 이런 비판도 나오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김성동 의원** 지금 이것도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수능의 난이도가 들쭉날쭉 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면 쉬워지고, 쉬웠다고 하면 어려워지고.

일관성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보완책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수능 전에 두 차례의 모의수능을 거치면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난해에도 모의수능 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모의수능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앞으로는 걸려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제위원들을 좀 보강한다든지 또 출제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 개편도 좀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수능 출제 난이도가 조절이 안 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동 의원** 저는 앞서 정부 정책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예로 입시정책·교육정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일관되게 입시정책을 추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예, 특히 이제 입시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참 미래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 수능은 현재 학력사회 구조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 입시정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저는 평생 정부 정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장관님께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들어가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성동 의원** 여성가족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다문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법안이 만들어진 지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김성동 의원** 예, 2004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문화부에서 창안한 말입니다. 10년이 채 안 됐지요. 그런데 지금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같은 것만 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쌍 중의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이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외국인과의 혼인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김성동 의원** 여기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 후에 이들이 국방 의무와 산업 현장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외국인들과 자녀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현재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빼고요, 중앙부처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지금 8개 부처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동 의원** 저는 10개 부처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8개 부처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기재부하고 외교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관련 업무를 하시고요 또 외교부는 외교관계로 국제결혼…… 외교 협력을 하고 직접 국내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김성동 의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시고 실무 위원장이 장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동 의원** 그런데 10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실무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께 맡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저희가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반 가족들과 저희 가족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처의 사업을 협조를 받아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동 의원** 장관님, 학계에서는 다문화의 영역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나아가서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시키고,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큰 주제는 결국 문화다양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수용 능력 증대다, 그래서 이런 이슈의 성격상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근거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분들이 계속 오셔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된 분들과 결혼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주노동자나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 저희가 같이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동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여성가족부의 시각으로 볼 때 급변하는ダイナミック한 다문화 문제를 좀 한쪽 부분만 치중해서 보실 그런 염려는 없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저희도 유학으로 왔든지 또는 취업을 위한 근로자로 왔든지 많은 오신 분들이 본래의 공부나 또는 학업이나 근로를 하시면서 가족들의 생활에 지원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실 때의 취지는 지금 결혼이민을 와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지원법을 만드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여성가족부가 조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책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로 논의해서 중복이나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 분들께서 필요하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동 의원** 예,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사회를 이미 거친 나라들마다 이른바 동화나, 통합이나 이런 논쟁을 거쳤지요. 결론은 소수자 집단이 자신의 문화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주류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고유한 생활양식을 지키면서 구성원 전체가 국가에 헌신하도록 하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주민을 사회 취약 계층으로 상정하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동화 위주에 근거하고 있는 정책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저희가 동화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표면을 보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좀 취약한 계층으로 결혼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이 많은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농촌에서도 다문화가족이 많으면서, 상대국을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잘 뿌리내리고 살 때 상호 이해에 기반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초기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동 의원** 다문화사회는 우리 사회에 가능성의 영역을 넓혀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단기적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은 절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가부장관이 꼭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행동과 실적을 통해서 일부의 우려를 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의의 주제인 신뢰와 통합에 관련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은 단순한 정치 체제 간의 통합이 아닌 체제 구성원 간의, 사람과 사람의 통합·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 잠시 좀 나와 주시지요.

지난 2월에 북한인권학회 학생들이 주관한 인권 관련 전시회 열린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동 의원** 아, 그러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법률에 규정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정부에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지금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관련 우리 국가적 책무, 인도적 지원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또 민간단체의 지원 업무 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해서 북한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젠가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우리는 북한 동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일 때 당신들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들의 최선을 다 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성동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김성동 의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훌륭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질의에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김항식 총리님을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2011년 새해에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성심성의껏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회부의장

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국민 여러분에게도 오래간만에 명목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두 원내대표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도 이제는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자유선진당의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권영길 전 민노당의 대표님을 위시하여 끝까지 좌석을 함께 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현재 약 6500여 건의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석 의원(281인)

장기갑	장기정	장길부	장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김호연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종진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백성운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건신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원회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윤상일 윤상현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개시 재석 의원(106인)

강길부 강명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김광림 김금래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재경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혜성 김효석
 남경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영아
 박우순 박희태 배영식 서병수
 서상기 송민순 신낙균 신성범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효대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성엽 윤상일 윤상현
 이경재 이균현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상권 이성현 이성현
 이애주 이용섭 이은재 이재선
 이종혁 이진복 이찬열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병완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종원 허원제 현기환
 홍사덕 황우여

○속시 재석 의원(78인)

강길부 강명순 강승규 강창일
 고흥길 권선택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무성 김상희 김성식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유정 김재윤 김재윤
 김정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용 김희철 남경필 박기춘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손 숙 미
 신 상 진 심 재 철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유 성 업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두 아 이 범 래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종 구 이 진 복 이 학 재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정 갑 윤
 정 병 국 정 옥 임 정 태 근 정 해 결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수 희 최 경 희 최 병 국 최 영 희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산회 시 재석 의원(36인)

강 명 순 권 경 석 권 영 길 김 낙 성
 김 무 성 김 성 동 김 성 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희 철 박 병 석 박 지 원 서 병 수
 서 종 표 양 승 조 이 경 재 이 두 아
 이 애 주 이 용 희 이 진 복 이 해 봉
 장 윤 석 정 갑 윤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해 결 조 해 진
 차 명 진 최 경 희 허 원 제 허 천

○청가 의원(6인)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 해 훈
 현 경 병 홍 희 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 병 국
 보건복지부장관 진 수 희
 환경부장관 이 만 의
 고용노동부장관 박 재 완
 여성가족부장관 백 희 영

○출석 정부위원

법 무 부 차 관 황 희 철
 여성가족부차관 김 교 식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최 시 중
 부 위 원 장 이 경 자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감사원장(양건)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최병국	한나라당	2011. 2. 28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감사원장(양건)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정훈	한나라당	2011. 2. 28
	노영민	민주당	

○의안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권영진·구상찬·김선동·김성식·김성태·김세연·김영우·신성범·유재중·윤석용·윤상현·이진복·이철우·현기환·황영철·황진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오제세·김용구·임영호·김영록·우제창·이용섭·김춘진·김창수·김효석·김성곤·최문순·최재성·조영택·정장선·유성업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오제세·전병헌·김성곤·장병완·유성업·유선호·김용구·주승용·최재성·이찬열·조영택 의원 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조승수·강기갑·유성업·조정식·유원일·김영진·권영길·장세환·이진삼·김재윤·박은수·홍희덕·곽정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박병석·양승조·조영택·박영선·이미경·김재균·우제창·홍영표·김상희·김효석·신학용 의원 발의)

3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창수·

류근찬 · 박선영 · 변웅전 · 이명수 · 이상민 · 이용희 · 이재선 · 이진삼 · 이회창 · 임영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박대해 · 김세연 · 주성영 · 신성범 · 김정권 · 현기환 · 유재중 · 황영철 · 이철우 · 이학재 · 정영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진영 · 김소남 · 박상은 · 김성동 · 김태원 · 임동규 · 이한성 · 김정권 · 구상찬 · 나경원 의원 발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김을동 · 김효재 · 김재윤 · 홍사덕 · 강용석 · 유원일 · 김세연 · 이찬열 · 정의화 · 이명수 · 서상기 · 김정권 · 강창일 · 김성동 · 이진삼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2010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1. 2. 28 한국방송공사사장 제출)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최문순) 사직의 건

(2011. 2. 28 최문순 의원 제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김을동 · 김효재 · 김재윤 · 홍사덕 · 강용석 · 유원일 · 김세연 · 이찬열 · 정의화 · 이명수 · 서상기 · 김정권 · 강창일 · 김성동 · 이진삼 의원 발의)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1. 2. 28 정부 제출)

2월 2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최연희 · 최병국 · 허천 · 정영희 · 한기호 · 송훈석 · 황영철 · 박우순 · 최경희 · 조경태 · 김정 · 권성동 · 정하균 의원 발의)

3월 2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신영수 · 강성천 · 김영선 · 이정선 · 김태원 · 박준선 · 손범규 · 주광덕 · 정진섭 ·

김성희 · 이화수 · 임해규 의원 발의)

3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최구식 · 신성범 · 김금래 · 권영진 · 조진래 · 정진섭 · 홍사덕 · 허원제 · 한선교 · 서병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신상진 · 유재중 · 김선동 · 이한성 · 김성수 · 박대해 · 현경병 · 김금래 · 손숙미 · 최경희 · 강명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의안 철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0. 10. 25 정부 제출)

2011년 2월 28일 제출자 철회 요구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1. 2. 25 배은희 · 이정선 · 유정현 · 이한성 · 권영진 · 강용석 · 안홍준 · 이종혁 · 신영수 · 홍정욱 · 나성린 의원 발의)

3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추천의뢰서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1. 2. 25 대통령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부 건보재정의 접목 필요성에 관한 질문서

(2011. 2. 28 이윤성 의원 제출)

○제298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시	2011년 3월 3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주요법안 처리 등
요구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외 276인

(2011. 2. 28)